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책학석사학위논문

연구성과의 정책반영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안 혜 경

연구성과의 정책반영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승 중

이 논문을 정책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9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안 혜 경

안혜경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2월

위 원 장 _____ 임도빈 (인)

부 위 원 장 _____ 엄석진 (인)

위 원 _____ 이승중 (인)



국 문 초 록

우리나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1970-80년대 경제 및 과학분야 중심의 정부싱크탱크로서 출발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국내외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기존의 정부부처에 예속된 구조적 문제점과 자율적이지 못한 운영체제에 따른 한계, 연구성과의 질을 보장하는 체제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9년 연구회 체제를 출범시켰고 지난 2005년에는 연구회간 통합을 하였다. 정부부처 소속이던 연구기관들을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이관시켜 경영분야 및 연구분야에 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실시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이 정책반영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경제·사회인문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분석대상을 국한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볼수록 성과평가 결과를 실증분석한 연구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책과 정책지식생산 및 활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와 정책반영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2005-2014년 간 연구성과가 정책반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분야성과(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정부과제 지원성과, 협동연구 추진정도)가 우수할수록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분야성과(기관장 리더십, 기

관장 책임경영정도, 기관장 재임기간)가 우수할수록 정책반영 되는 정도도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연구보고서의 우수성과 기관장 책임경영정도만이 정책반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협동연구 추진정도, 기관장 리더십, 기관장 재임기간은 정책반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분석 결과를 통해 정책의제를 형성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연구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조직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바로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관장이 조직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경영목표를 이행하고 책임경영을 수행할수록 정책반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패널분석을 토대로 기존연구와의 비교 및 인터뷰 조사를 한 결과, 연구역량(조직의 전문성)인 연구보고서 우수성이 정책반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사실은 기존연구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인터뷰이(Interviewee, 인터뷰 조사의 연구자)는 연구보고서의 성격에 따른 유형에 따라 정책반영도는 다를 것이라고 보았다. 기존연구에서 정책반영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였던 기관장 재임기간(리더십의 대리변수)은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변수는 아니었다. 이에 대해 인터뷰이 역시 기관장 재임기간 변수가 유의미한 변수는 아니라고 본 연구결과에 동의하였다. 반면 기관장 책임경영정도의 조작적 정의가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변수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지식활용에 초점을 맞춰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연구대상으로 연구성과와 정책반영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정책반영과 관련해 정부싱크탱크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목표 및 발전방향 제시하였다는 점에 정책적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연구성과, 정책반영, 정책지식활용, 정부출연연구기관

학 번 : 2011-22201

목 차

| | |
|-----------------------------------|----|
| 제1장 서 론 | 1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
|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 2 |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 1. 연구범위 및 대상 | 4 |
| 2. 연구방법 | 5 |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7 |
| 제1절 이론적 논의 | 7 |
| 1. 정책에 관한 논의 | 7 |
| 2. 정부의 정책지식생산에 관한 논의 | 9 |
| 3. 정부의 정책지식활용에 관한 논의 | 11 |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14 |
| 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영향력에 관한 연구 | 14 |
|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한 연구 | 15 |
| 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체제에 관한 연구 | 16 |
| 4.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17 |
| 제3절 비판적 검토 | 20 |
| 제3장 현황분석 | 24 |

| | |
|------------------------------------|----|
| 제1절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현황 | 24 |
| 1. 평가의 목적 | 24 |
| 2. 평가도입 및 변천 | 24 |
| 3. 주요 법적 근거 | 26 |
| 4. 평가관련 기구와 조직 | 27 |
| 5. 평가절차와 방법 | 29 |
| 6. 평가내용 | 31 |

| | |
|--|----|
| 제2절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의 정책반영 문제점 분석 | 36 |
| 1. 연구과제중심운영체제(PBS) 하에 연구성과 관련 문제점 | 36 |
|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성과 평가체제 관련 문제점 | 36 |
| 3. 비판적 검토 | 37 |

제4장 연구설계 39

| | |
|-------------------|----|
| 제1절 연구가설 설정 | 39 |
|-------------------|----|

| | |
|--------------------------|----|
| 제2절 연구설계 | 42 |
| 1. 연구의 분석틀 | 42 |
| 2.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 43 |
| 3. 연구의 분석모형 | 46 |
| 4. 연구방법 | 47 |

제5장 분석결과 48

| | |
|------------------------|----|
| 제1절 기술통계 분석 | 48 |
| 1. 종속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 48 |

| | |
|--------------------------------|-----------|
| 2. 독립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 50 |
| 3. 통제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 63 |
| 제2절 패널분석 | 71 |
| 1. 분석결과 | 71 |
| 2. 가설검증과 해석 | 73 |
| 제3절 종합적 분석 | 76 |
| 1. 기존연구와의 비교 | 76 |
| 2. 인터뷰 조사 | 77 |
| 3. 종합적 분석 | 83 |
| 제6장 결론 | 85 |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85 |
| 제2절 이론적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 | 87 |
| 제3절 연구의 한계 | 89 |
| 참고문헌 | 91 |
| Abstract | 98 |

표 목차

| | | |
|----------|----------------------------------|----|
| <표 1-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 4 |
| <표 2-1> | 선행연구 동향 | 20 |
| <표 3-1>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과정 | 26 |
| <표 3-2> | 2015년도 연구기관 평가내용 | 32 |
| <표 4-1> | 연구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9 |
| <표 4-2> | 변수의 정의 및 조작화 | 45 |
| <표 5-1> | 종속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 48 |
| <표 5-2> | 기관별 종속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 48 |
| <표 5-3> | 독립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 51 |
| <표 5-4> | 기관별 연구보고서 우수성에 관한 기술통계 | 52 |
| <표 5-5> | 기관별 정부과제 지원성가에 관한 기술통계 | 53 |
| <표 5-6> | 기관별 협동연구 추진정도에 관한 기술통계 | 54 |
| <표 5-7> | 기관별 기관장 리더십에 관한 기술통계 | 55 |
| <표 5-8> | 기관별 기관장 책임경영정도에 관한 기술통계 | 56 |
| <표 5-9> | 기관별 기관장 재임기간에 관한 기술통계 | 57 |
| <표 5-10> | 연도별 기관장 리더십에 관한 기술통계 | 61 |
| <표 5-11> | 통제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 63 |
| <표 5-12> | 기관별 조직연령에 관한 기술통계 | 64 |
| <표 5-13> | 기관별 총예산액에 관한 기술통계 | 65 |
| <표 5-14> | 기관별 총인원수에 관한 기술통계 | 66 |
| <표 5-15> | 기관별 연구인력수에 관한 기술통계 | 67 |
| <표 5-16> | 패널분석 결과 | 72 |
| <표 5-17> | 가설검증 결과 | 74 |

그림 목차

| | |
|---|----|
| <그림 3-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평가체계 | 28 |
| <그림 3-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모형 | 30 |
| <그림 4-1> 연구의 분석틀 | 42 |
| <그림 5-1> 연구별 종속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 50 |
| <그림 5-2> 연구별 연구보고서 우수성에 관한 기술통계 | 58 |
| <그림 5-3> 연구별 정부과제 지원성파에 관한 기술통계 | 59 |
| <그림 5-4> 연구별 협동연구 추진정도에 관한 기술통계 | 60 |
| <그림 5-5> 연구별 기관장 책임경영정도에 관한 기술통계 | 62 |
| <그림 5-6> 연구별 기관장 재임기간에 관한 기술통계 | 62 |
| <그림 5-7> 연구별 총예산액에 관한 기술통계 | 68 |
| <그림 5-8> 연구별 총인원수와 연구인력수에 관한 기술통계 | 69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정부출연연구기관¹⁾은 1970-80년대 경제 및 과학분야 중심의 정부싱크탱크²⁾로서 출발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건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당시의 국책 연구기관들은 각 부처의 정책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립·운영되었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기의 정책입안과 집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큰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이광훈 외, 2014).

그러나 국내외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기존의 정부부처에 예속된 구조적 문제점과 자율적이지 못한 운영체제에 따른 한계, 연구성과의 질을 보장하는 체제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하게 되었고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엄준용·조홍순, 2007). 이에 정부는 1999년 연구회 체제를 출범시켰고 지난 2005년에는 연구회간 통합을 하였다. 이전에 정부부처 소속이던 연구기관들을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이관시켜 경영분야 및 연구분야에 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실시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정부의 양적·질적 차원의 정책

-
- 1) 정부출연연구기관(약칭 “출연연”)은 크게 과학기술계 R&D조직과 경제·인문사회분야 출연연으로 구분되며, 후자의 경우 정책지식을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국책연구기관, 국책연구원, 싱크탱크(think-tank) 등의 다양한 용어로 지칭된다.
 - 2) 싱크탱크(think-tank)란 전문성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책지식을 생산하고 정책적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이고 비영리적 조직을 의미한다(Rich, 2004: 11; 김판석, 2007: 35)

지식을 생산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이 정책과정 및 집행에 실제 어떻게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정책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이 정책반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정부싱크탱크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목표 및 발전방향 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실제 연구성과와 정책반영에 관한 국내연구에서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성과를 정책반영에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이길우 외, 2012; 이민형 외, 2012), 공공조직의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을 평가하는 연구(이홍재·차용진, 2006a; 장지인 외, 2008), 조직의 연구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에 관한 연구(김권식·이광훈, 2014; 이홍재·차용진, 2009) 등 과학기술분야와 정부부처를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와 조직의 성과체제를 평가하고 결정짓는 요인을 밝힌 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다수 존재하였다.

다시 말해서 정부기관 및 정부부처, 연구기관이지만 분야가 다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연구대상으로 한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에 비해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다. 그 뿐 아니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에 초점을 맞춘 실증분석은 많았지만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실증분석 한 연구 또한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3개의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평가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이 정책반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실증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책과 정책지식생산 및 활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의 역할과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와 정책반영의 상관관
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및 대상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이 정책반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를 2005-2014년 10년간의 연구성과물로 설정하였다. 이는 2005년 연구회간 통합 후 평가체제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연구범위를 2005년부터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조직은 정치적·제도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진보정권(노무현정부, 2005-2008) 및 보수정권(이명박정부 및 박근혜정부, 2008-2014) 기간 내 연구성과가 정책반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총 23개의 기관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선정한 이유는 기존국내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과학기술분야와는 다른 성격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 분야 | 기관명 | 설립연도 | 설립목적 |
|--------|-----------|------|-------------------------------------|
| 경제정책분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989 | 세계경제와 관련된 문제의 연구·분석 |
| | 산업연구원 | 1984 | 국내외 산업·기술 관련 조사·연구 |
| | 한국개발연구원 | 1971 |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연구 및 국가경제정책의 수립 관련 연구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978 | 농촌경제 및 농촌사회발전에 관한 종합적 연구 |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1992 | 조세제도, 조세행정 및 관련 사항 조사·연구 |

| | | | |
|---------------------------------|-------------|------|---------------------------------------|
| 자 원 인 프 라 분 야 | 국토연구원 | 1978 |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의 종합연구 |
| | 에너지경제연구원 | 1986 | 국내외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조사·연구 |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985 | 국내외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분야의 조사·연구 |
| | 한국교통연구원 | 1987 | 교통정책 및 기술 연구 및 교통정책 관련 정보 조사·분석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997 | 해양·수산 및 해운항만산업 관련 제부문 조사·연구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993 | 환경정책 연구개발,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 |
| 인 적 자 원 분 야 | 한국교육개발원 | 1972 | 교육 현안에 관한 종합적 연구 및 교육체제 개발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998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과정 연구 및 각종 교육평가 연구·시행 |
| | 한국노동연구원 | 1988 | 노사관계 제문제 연구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81 | 사회복지 및 사회정책 관련 제부문 정책과제 연구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983 |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997 |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
| 공 공 정 책 분 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989 | 청소년 관련 제문제 연구 |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987 | 과학기술 활동 및 과학기술 관련, 경제사회의 제반문제 연구 |
| | 통일연구원 | 1991 | 민족공동체 회복과 통일에 대한 제반 사항 연구 |
| | 한국법제연구원 | 1990 | 법제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 |
| | 한국행정연구원 | 1991 | 행정체제 발전, 행정제도 및 운영 개선 관련 연구 |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88 | 범죄의 실태, 원인 및 대책 관련 종합 연구 |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www.nrcs.re.kr)>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회귀분석 방법 두 가지 연구방법을 적용한다. 주요 연구자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발간하는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소관연구기관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2005-2014년 10년 간의 성과평가를 평가하는 패널 데이터이다. 그 외 알리오(alio.go.kr), 프리즘(prism.go.kr), 국가연구정책포털(nkis.re.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s.re.kr),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의 자료를 활용한다. 주요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검토를 위한 문헌분석과 가설검정을 위한 회귀분석방법이며, 회귀분석은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을 사용한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에 대해 기존연구와의 비교 및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론적 논의

1. 정책에 관한 논의

정책학은 사회 속에서 인간이 부딪히는 근본문제(The fundamental problems of man in society)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The fuller realization of human dignity)하기 위한 지식개발을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문제지향적(problem-oriented), 맥락적(contextual), 규범적(normative)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학문이다(황창호, 2014 재인용; Lasswell, 1951; 목진휴 외, 2007; 류지성, 2007; 홍준형, 2008). 정책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정책(Policy)라는 사회현상이다. 그러나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학자들 간 의견을 통일하기 어렵다. 이는 실제 현상들을 연구대상으로 하게 되면 연구자가 현상의 어느 측면을 보다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정정길 외, 2008).

Lasswell(1951)은 정책을 “미래탐색을 위한 가치와 행동의 복합체”라고 정의하였고, Easton(1965)은 “사회전체를 위한 가치들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하였다. Dye(1978)은 “정부가 하기로 혹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Wildavsky(1979)는 정책을 “목표와 그것의 실현을 위한 행동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Dror(1983)는 “주로 정부기관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미래를 지향하는 행동의 주요지침이며, 이 정책은 최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익을 달성할 것을 공식적인 목표로 삼는다”고 하였다. Lowi(1970)은 정책을 “의도적인 강압, 즉 강압의 목적, 수단주체, 대상을 밝히려는 설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훈(2010)은 “정부가 우리사회와 관련 있는 시급한 문제들을 권

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생활의 질과 공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인 활동지침”으로 정의하였다. 허범(1981)은 정책을 “가치관 속에 들어 있는 당위성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행동을 통합함으로써, 문제시되는 어떤 현실의 내용(환경의 부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지침적 결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정정길 외(2008)은 정책을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할 기본방침”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정책학에서 정책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정책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권위있는 정부기관의 행동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책목표는 “정책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desirable state)”이다. 정책목표는 시간적으로 보아서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이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도달할 수 없는 상태를 정책을 통해서 실현코자 하는 발전지향적 성격 또는 의지를 나타낸다. 또한 정책목표는 무엇이 바람직한 상태인가를 판단하는 가치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관적이며, 타당성이나 규범성을 지니고 있다. 정책수단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정책수단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갈등은 치열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책수단은 효과성, 능률성만이 아니라 평등성 등의 여러 가지 평가기준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다(정정길 외, 2008). 정정길 외(2008)에서 정책대상집단은 정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를 받는 수혜집단, 정책으로 인해 희생을 당해야 하는 정책비용부담자 모두를 포함한 정책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집단은 정책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이다.

정정길 외(2008)은 그 외에 정책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제시하였다. 정책은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결정하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관한 기본방침만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후 집행하면서 세밀화 및 구체화하게 된다. 그래서 결정당시의 정책은 기본방침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책은 정책대상 집단의 반대 혹은 희생을 무릅쓰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및 집행 의지를 보여준다.

이상 종합하면,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정책은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적용을 받는 정책대상 집단을 결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한 후 정부는 정책대상집단의 희생이 있더라도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해 나가고자 한다.

2. 정부의 정책지식생산에 관한 논의

정부는 정책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순한 경험적 지식을 뛰어넘어 대·내외적 상황과 맥락,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특수성을 연결시켜 현실에 입각한 실용적 지식과 부분 및 전체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이 통합된 정책지식이 필요하게 되었다(김선빈 외, 2007). 왜냐하면 하나의 정책지식이 생산되어서 활용에 이르는 과정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개체가 아닌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황창호, 2014).

지식은 “특정 가치를 생산하는데 활용되거나, 현실문제 해결에 즉시 활용될 수 있는 정보의 결합으로서 경험에 준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황창호, 2014 재인용; Leonard & Sensiper, 1998). 정책지식은 시정의 현황이나 과제나 논점, 미래예측, 정책방침 등을 나타내는 자료나 정책과정에서의 활용되는 단기 계획, 각종 통계, 백서, 보고서 등 자료들을 통합, 가공하여 새롭게 재생산된 복합적인 지식이라 할 수 있다(황창호, 2014 재인용; 노영희, 2007; 이지수, 2009; 꺾

승진 외 2011).

정책지식에는 중요한 몇 가지 특성이 존재한다. 첫째, 정책지식이 생산되어 활용되기까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전문가들이 정책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서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지식을 생산하고 활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사회를 빠르고 급격하게 변화시켜왔다. 우리사회를 둘러싼 현실문제 또한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지식의 생산과 현실에 적합한 실용적인 정책지식의 생산이 필요하다(황창호, 2014).

정부의 정책지식은 공공부문의 생산성향상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시켜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간주(황창호, 2014)된다. 그에 따라 지식생태계, 지식관리, 지식생산, 지식활용, 정부의 정책기조 등 다양한 관점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채승병 외(2006)에서는 정책지식을 생태계관점에서 개념화하고 정책지식 생태계의 행위자기반 모형을 구축하여 정책지식이 생태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책지식은 행정효율을 극대화하는 지적인 기반구조라고 하였으며, 정책지식 생태계는 생산·소비·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 기관 그리고 둘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보았다.

이홍재·차용진(2006a)에서는 정책지식을 관리관점에서 보고, 15개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식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 지식창출과 업무성과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한 결과 업무프로세스, 구성원 태도, 최고관리자 리더십 등이 지식창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지식창출 방안으로, 지식창출을 포함한 지식관리 활동과 업무프로세스의 연계, 조직구성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태도, 지식창출 및 지식관리에 대한 최고관리자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등

을 제시하였다.

김성현·명성준(2010)은 정책지식을 생산관점에서 본 후, 1995년 이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발간된 미래예측과 관련된 기본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정부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미래예측활동 현황을 살펴보았다. 연구에서는 정책관련 지식을 만들어 내어야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미래연구 방향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저출산, 고령화, 인적자원 등 상호의존성이 높은 분야의 협동연구를 통한 거시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허만형 외(2011)에서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정책보고서인 정책지식이 직접적인 수요자인 정부부처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즉, 정책지식 활용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출된 정책지식의 현실적 합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공무원(수요자)이 연구원(공급자) 보다 낮은 평가를 하였다. 공무원이 정책지식 활용을 통하여 임과워먼트를 달성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관련 지식수준의 향상에는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의 정책활용에 있어서도 해결책 정당화, 부처의 전반적인 정책기조의 확립에 상대적으로 더 큰 활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창호(2014)에서는 정책지식을 정부의 정책기조와 연관시켜,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른 정책지식생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정권이 바뀌면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기조에 따라 정책지식이 활발하게 생산되는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는 정권의 이념과 상관없이 정책지식이 활발히 생산되었다. 정책지식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기관 역시 정권교체가 일어나더라도 큰 변화는 없었다. 반면 정책지식을 생산하는 정부부처는 정책기조에 따른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부의 정책지식활용에 관한 논의

문제지향이라는 정책학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지식활용의 논의는 정책지식의 공급자와 수요자라는 두 행위자를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다(박치성 외, 2011). 정책지식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활용되기 때문에 정책지식의 생산자는 정책지식활용의 적실성 문제를, 수요자는 그 지식의 활용성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책지식 공급자의 측면에서 정책지식활용에 관해 논의한다면, 정책지식 공급자는 정책문제상황에 대한 지식생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민감하며, 실제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지식을 생산하는 것에 더 우위를 둔다(박치성 외, 2011). 그에 따라 정책지식 공급자는 지식활용이 높은, 현실의 적실성이 높은 정책지식을 산출하여 정책지식 수요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따라서 정책지식 공급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정책지식활용에 있어 적실성인 것이다.

반면 정책지식의 수요자인 정책리더의 역할은 정책에 적실성 있는 지식을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지식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정책지식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적 타당성(current adequacy)이 담보되어야 한다(박치성 외, 2011 재인용; Bobrow & Dryzek, 1987). 정책지식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실세계의 복잡성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정책리더들은 복잡한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전문가들로부터 다학문적인 정책지식의 제공을 받아야 한다(박치성 외, 2011 재인용; MacRae, 1985). 이 다양한 또는 다학문적인 정책지식을 특정 정책상황에 가장 적합하도록 재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정책지식 수요자의 역할인 것이다(박치성 외, 2011).

정책지식활용은 Landry, Amarar, & Lamari(2001)의 의해 정책지식의 생산자와 수요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4가지 모형으로 나뉜다. 첫째, 지식생산자 중심모형(science push model)이다. 학자들의 능동적인 지식생산이 주가 되며, 사용자는 생산된 지식의 단순 수요자로

규정된다. 둘째, 지식수요자 중심모형(demand pull model)이다. 지식의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지식을 계약과 같은 관계에 의하여 공급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의 문제점은 수요자의 이해관계에 부응하는 지식만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허만형 외, 2011 재인용; Oh, 1997). 셋째, 지식전파 모형(dissemination model)은 지식의 전파(knowledge transfer)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수요자에게 이를 수 있도록 전파노력에 의해 활용되는 모형이다. 그러나 이 모형은 지식전파에 있어 일방향적인 지식흐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넷째, 상호작용 모형(interaction model)은 지식의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양방향 의사소통이 지식활용의 효과를 높인다는 점을 강조한다(허만형 외, 2011). 양방향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정책지식활용이론이 정립된 이후에는 지식이 활용되지 않는 원인에 관한 다양한 관점(지식 생산자-수요자 행태에 따른 원인 탐색, 시차의 관점에 따른 원인 탐색 등)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 종합하면, 정책지식활용은 생산자-수요자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통해 적실성 있는 지식을 산출하고 이 지식이 정책에 활용되도록 노력하는 일련의 정책네트워크 과정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식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양방향 의사소통에 의한 상호작용 모형이 지식활용의 효과를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영향력에 관한 연구

정광호(2005)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은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제 형성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정책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은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인지공동체(epistemic community)의 형태나 정책옹호연합(policy advocacy coalition)으로 개념화되고 있다(정광호, 2005 재인용; Haas, 1992; McGann&Weaver, 2000). 정광호(2005)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이론과 정교한 방법론에 관해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고 주장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아이디어가 정책과정에서 구현되는 정도에 초점을 두고 매체 인용건수(media citations), 의회증언회수(parliamentary testimony), 출판물의 배포와 구독현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말하였다.

이광훈 외(2014)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전문성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책지식을 생산하고 정책적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을 의미(Rich, 2004; 김판석, 2007)한다고 규정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부처의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정책보조 역할을 함으로써 공공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광훈 외(2014)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방법론적 난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측면, 수요측면, 미션달성도 등의 지표가 활용되어 왔다고 밝혔다. 공공측면 지표의 경우, 싱크탱크의 재원과 운영인력 수준, 기부금 확보능력, 싱크탱크 네트워크와 연계된 주요 인물 등을 꼽을 수 있다. 수요측면 지표의 경우, 미디어 노

출정도, 의회증언 건수, 브리핑 건수, 공직에 임용되는 연구원 수, 공공기관에 컨설팅하는 정도 및 정책환경에의 전반적인 영향력 등이 있다. 조직의 미션달성도 지표의 경우, 싱크탱크의 아이디어가 정책결정자에 의해 채택되는 정도, 고객집단 만족도, 정책네트워크 활성화 정도, 학술저널에 인용되는 정도, 사이비 공간에서의 영향력 등을 들 수 있다(이광훈 외, 2014).

박치성 외(2011)는 McGann(2005)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정리한 후, 싱크탱크로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책연구와 정책옹호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즉 정부와 대중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통하여 공무원에게 신뢰와 확신을 주는 역할, 정책토론에서 정책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독립적인 목소리를 제공하는 역할, 현재 정책이슈, 제안, 프로그램들을 밝혀내고 평가하는 역할, 정돈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사회문제를 정책이슈로 전환하는 역할, 정책이슈를 전자/대중 미디어에 해석하여 제공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국내외 정책문제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 정책형성과정에서 주요 정책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정보나 아이디어의 교환을 위한 건설적인 포럼을 제공하는 역할, 이슈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활성화 역할, 정부나 입법부에 전문인력을 제공하는 역할, 관료들의 SOP나 관습적인 지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박치성 외, 2011) 등이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한 연구

황윤원(2006)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 및 예산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연구원 독립성의 저하와 부처의 감독과 통제, 부처이기주의와 중복연구, 우수연구인력 유출, 상대적 경쟁력 약화, 고위정책결정자들의 싱크탱크 활용 미흡 등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연구 개발정책 방향 설정, 합리적인 예산지원체계 확립,

연구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황운원, 2006 재인용; 경제사회연구회, 2000). 또한 부처이기주의와 중복연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회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장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책연구원으로서 우수한 연구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에 합당한 적절한 대우와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존립 목적 및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고위정책결정자들이 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고,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시스템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정광호(2005)에서는 미국의 싱크탱크의 역할과 영향력을 정리하여 소개한 후, 한국의 싱크탱크가 직면한 재원의 독립성, 연구의 자율성, 연구역량의 문제를 논의하고 앞으로 싱크탱크로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서 연구와 재정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싱크탱크로서의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키우기 위해 관련 학계와 공동 연구수행, 연구원 초빙 등 인사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연구성과물이 행정부, 의회, 정당 등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촉진시킨다.

김계수·이민형(2005)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운영체제(PBS)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을 설문조사하여 연구사업의 경쟁적 수주체제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후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들과 새로운 R&D 수행체제에 대한 의견(ex. 공동전략 연구사업, 통합연구회로 책임주체 단일화 등)을 제시하였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체제에 관한 연구

엄준용·조흥순(2007)은 연구회체제 하에서 수행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체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평가 계획단계, 평가 실행단계, 평가결과 및 활용단계별로 밝히고 평가의 발전방향을 단계

별로 제시하였다. 평가 계획단계는 평가목적의 재정립, 평가편람의 확정 및 배포시기 조정, 평가항목 및 지표의 개선, 평가위원 구성의 다양화이고 평가 실행단계는 평가자간 신뢰도 확보 기제의 마련, 수요자만족도 조사의 개선, 기관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의 개발이며 평가결과 및 활용단계는 절대평가제의 도입, 평가의 컨설팅 기능 강화,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체계의 강화이다.

김홍식·박근영(1998)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평가에 관한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지표의 적절성과 평가지표의 가중치 설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평가 모형 및 체계에 있어서 연구과정관리 및 연구지원관리와 더불어 의식관리 즉, 조직문화와 리더십을 포함하여 성과평가 모형을 개선하였다.

이광훈 외(2014)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때 고려할 중요한 요인을 수요자의 정책지식 활용도, 즉 연구성과물의 정책기여도라고 보았다. 국책연구기관이 생산한 연구물의 활용이 국책연구원의 존립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이광훈 외, 2014 재인용; 황윤원, 2006), 정책영향력의 주요한 평가기준은 정책기여도 즉, 수요자인 정부에게 유용한 연구결과물을 제공하고 실제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서 정책지식이 적절히 활용되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이광훈 외, 2014 재인용; 허용만 외, 2011).

김도년·주상호(2014)는 경제·인문사회분야 23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분석하였는데 실제 기관평가 결과와 차이가 존재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효율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비효율적 연구기관은 비정규직 수, 연구사업비, 논문게재 건수, 자체과제 건수가 효율성 변화에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효율적 기관은 자체과제 건수, 수탁 및 수시과제 건수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최재녕(2010)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과제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연구성과 분석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고, 현정부의 공약집 분석을 통해 8개의 핵심 주제를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한 결과 미래정책수요 대비 과제의 비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정책기여를 위한 정책연구의 비율이 너무 높아 조정이 필요하며 연구기관별 연구자의 일인당 보고서 집필분량의 과도한 차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정윤수 외(2008)은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소관 23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물의 분석·관리 현황을 설문조사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관리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식정보검색시스템(IKIS, Institute Knowledge Inventory System)을 통한 연구성과물의 현황을 밝히고 연구성과물이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연구성과물의 DB화 구축, 연구성과물의 적극적인 추가가공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김권식·이광훈(2014)은 기존 연구문헌들이 제시하는 공공연구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수준(개인, 조직, 환경/제도)에 따라 분류·정리하였다(김권식·이광훈, 2014 재인용; 이민형, 2003; 길종백·염재호, 2008; 김이수·조만형, 2009; 왕재선·김서용, 2009). 첫째, 조직에 속한 개인수준의 요인들로서 직무만족, 성과불만족, 지각된 성과 요소, 내적 동기, 인사 연구자의 연령, 연구경험,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적 배경, 의사결정자의 변화지향성, 변화주도자 및 관리자의 지위와 역할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조직의 특성 차원의 변수들로서 조직 구조적 측면 요인인 전문화, 분화(differentiation), 탈집권화, 공식화, 계층화 및 조직크기, 조직연령, 기관의 명성, 조직문화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조직환경 및 제도적 수준의 요인으로서는 연구환경의 특성(이질성, 불확실성, 변화, 적절한 경쟁환경, 조성 등), 고객/공동체 요소, 조직간 상호의존성, 조직간 관계 및 협력과 네트워킹, 협력의 정도 및 존속기간(degree and

duration of collaboration), 개인연구자들에 대한 연구자금(research grants) 지원 체계 등을 들 수 있다(김권식·이광훈, 2014).

이광훈 외(2014)는 연구조직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역시 개인수준, 조직수준, 환경적·제도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기여도에 주목하여 조직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관한 실증연구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 기관장의 재임기간과 재임여부가 정책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제3절 비판적 검토

연구대상을 정부출연연구기관 국한하여 정책과 정책지식, 운영 및 성과체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검토를 기초로 하여, 그 외 정부부문까지 대상을 확장하여 선행연구 동향을 정리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선행연구 동향

| 분석대상 | | 분석내용 | 문헌근거 |
|--------------------------------------|----------------|--|---|
| 정 부 출 연 연 구 기 관 | 경제·사회 인문분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체제 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탐색 | 엄준용·조홍순(2007) |
| | | 정부출연연구기관 효율성 평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김도년·주상호(2014) |
| | 과 학 · 기 술분야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요 문제 점을 분석하고 변화방향과 시스 템 개편 제안 | 이길우 외(2012) 이민형 외(2012) |
| |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지표 제시 | 최문정 외(2010) |
| | | 평가 참여자의 인식차이를 중심 으로 연구기관 평가 실증분석 | 이찬구(2009) |
| | 분야전반 | 정책과정의 참여자로서 정책연 구원의 역할과 정책과정에 미치 는 영향 분석 | 박치성 외(2011) 이광훈 외(2014) 정광호(2005 재인용; Abelson (1996), Abelson(2000), Abelson and Carberry(1997), Fischer(1991), Kingdon(1995), Posen(2002), Stone and |

| | | | |
|------------------------|--|---|---|
| | | | Denham(2004)) |
| | |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 김계수·이민형(2005) 정광호(2005) 황윤원(2006) |
| | | 평가체제의 문제점 및 평가모형 제시 | 김계수·이민형(2005) 김홍식·박근영(1998) 엄준용·조홍순(2007) |
| | |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 조직, 환경/제도 분석단위로 분류·정리 | 김권식·이광훈(2014) 재인용; 길종백·염재호(2008) 김이수·조만형(2009) 왕재선·김서용(2009) 이민형(2003)) 이광훈 외(2014) |
| |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조직전문성 과 자율성에 관한 실증분석 | 이광훈 외(2014) |
| | | 고성과 조직과 저성과 조직을 비교하여 연구환경(관리적 환경, 창의적 환경)과 조직효과성 간 의 관계 분석 | 정한규·손태원(2004) |
| 정부출연연구 기관 연구보 고서 | | 연구성과 분석기준 정립 후 실증 분석 | 최재녕(2010) |
| | | 연구성과물의 분석·관리 현황을 설문조사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관리방향 제시 | 정윤수 외(2008) |
| | | 미래예측과 관련된 기본보고서 을 통한 현황분석 및 미래연구 방향과 운영방안 제시 | 김성현·명성준(2010) |
| 공공부문 (정부부처) | | 중앙행정기관들을 대상으로 지 식관리의 기반요인을 검증하고 지식관리와 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 | 이홍재·차용진(2009) |

| | |
|--|----------------|
|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식창출과 업무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지식창출 전략제시 | 이홍재·차용진(2006a) |
| 중앙행정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식관리 활동차원들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 | 이홍재·차용진(2006b) |
| 중앙부처의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대안 제시 | 장지인 외(2008) |

우선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분석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연구성과와 정책반영에 관한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뿐 아니라 공공부문까지 확대하여 성과관리 및 시스템의 운영실태에 대한 개략적인 선행연구 검토를 하였고,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야별로 성과체제와 시스템의 운영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을 세분화하여(경제·사회인문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분석대상을 국한하여) 살펴볼수록 성과평가 결과를 실증분석한 연구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광훈 외(2014)의 연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 기관장의 재임기간과 재임여부가 정책형성과정에서 담당하는 기능 및 역할에 있어서 정책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기여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시도하였지만 자원의존이론 관점에 입각하여 이뤄진 연구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의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던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23개의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평가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이 정책반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실증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밝혔던 요인 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보

다 정교하고 타당성 있는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평가
체제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확인한 후 고려요인이 될 수 있는지도
파악하고자 한다.

제3장 현황분석

제1절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현황

1. 평가의 목적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의 목적은 연구기관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정책대안 개발과 기초·정책지식 생산 및 공급과 관련된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기능수행 과정이 효과적·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5). 연구기관의 평가를 통해 기관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2. 평가도입 및 변천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사회에서는 필요로 하지만 대학이나 기업부설연구기관들이 담당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거나 이들 연구기관들에 의해 실제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분야들 가운데 국가에서 중요하다고 필요성을 인정하여 선정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들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과학기술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지난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기간의 경제사회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다. 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1970년-1980년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수반되는 사회문제의 대두, 다변화된 국제적 경쟁, 사회분열과 대립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수준의 향상, 여성 및 청소년의 육성, 공

공분야의 효과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문국책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다(이석희, 2003). 당시에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1962년), 한국과학기술원(1966년), 한국개발연구원(1971년, KDI) 등은 정부부처의 정책개발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기에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대신 감독과 통제를 받았다.

경제부처의 경제체제 시대(1970년대 후반), 민간기업의 싱크탱크 시장 참여시대(1980년대), 정부 싱크탱크의 비경제부처 가세시대(1990년대 초), 정부 싱크탱크 시장의 지방자치단체 진입시대(1990년대 초)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싱크탱크는 다양해졌지만 국내외 환경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중복된 연구, 각 부처를 대변하는 부처 이기주의적 연구, 부처의 과도한 감독으로 인한 연구원들의 사기 저하, 운영상의 경직적 관료주의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정되기 시작했다(황윤원, 2006).

1999년 정부는 공공부문 경영혁신정책의 선도부문으로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영혁신과 연구성과의 질적·양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문학적·사회과학적 문제에 대응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들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1999.1.29.)」을 제정·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같은 해 3월 15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인문사회연구회 등 5개 연구회(인문사회연구회, 경제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가 42개 소관연구기관을 관리하는 연구회체제(Council System)를 출범시켰다(엄준용·조홍순, 2007). 연구회체제하에 매년 연구기관의 연구 및 경영성과에 대해 평가한다. 이러한 연구회체제는 이전에 비하여 연구기관 전문화·특성화 촉진, 연구에 대한 일선부처 만족도 상승 및 정부반영 실적 증가, 복잡한 국정현안해결을 위한 협동연구사업 활성화 기반 구축 등 양적·질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8).

<표 3-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과정

| 연대 | 주요내용 |
|----------|--|
| 1970년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분야 중심으로 발전 ▪ 한국개발연구원 독점체제 ▪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감독 |
| 1980년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의 싱크탱크 시장 참여 |
| 1990년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싱크탱크의 비경제부처 가세 ▪ 정부 싱크탱크 시장의 지방자치단체 진입 ▪ 성과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제기 |
| 1999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실 통합연구회체제 (5개 연구회, 42개 소관연구기관) ▪ 출연연법 제정 ▪ 연구평가 실시 |
| 2005년 이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 |

3. 주요 법적 근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8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 제20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정관」(제47조)에 근거하여 소관 연구기관의 평가를 실시하여 매년 평가결과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8조)

이 법률은 연구기관 평가와 관련된 조항으로 제1항에는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

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는 “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 제20조)

이 시행령의 제19조는 연구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조항이고, 제20조는 연구기관 평가결과의 제출과 관련된 조항이다. 제19조 제1항은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연구와 경영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9조 제2항은 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의 실적에 대해 평가할 사항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0조는 제1항과 제2항은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각 연구기관의 평가결과서와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정관」(제4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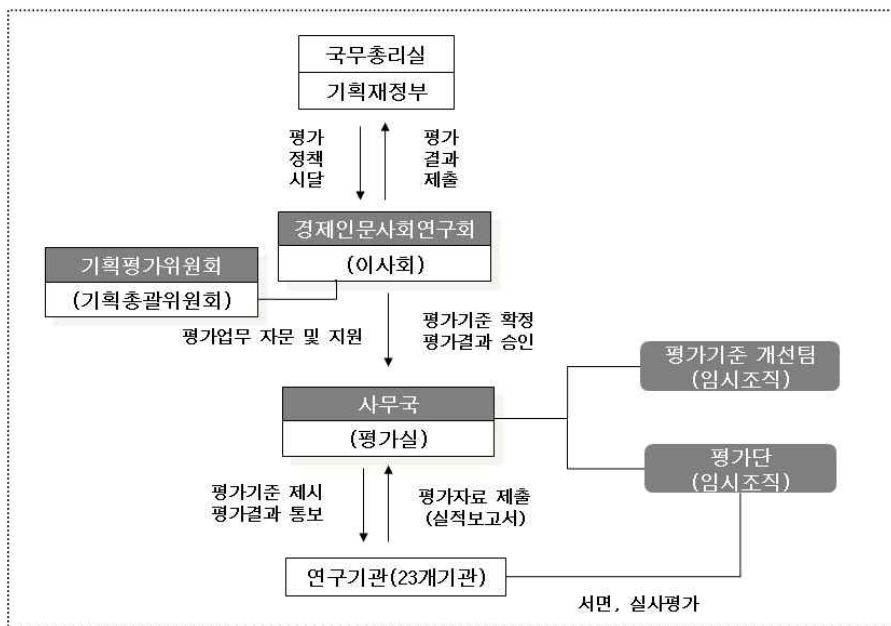
정관 제47조 역시 연구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조항으로 제1항, 제2항, 제4항은 각각 제19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0조 1항의 내용과 같다. 제3항은 “국무총리는 제2항의 평가내용 외에 추가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4. 평가관련 기구와 조직

평가관련 기구와 조직은 <그림 3-1>과 같다. 국무총리실과 기획

재정부로부터 평가정책이 시달되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평가기준을 확정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제시한다. 각 연구기관은 서면 및 실사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서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림 3-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평가체계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5)>

1)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연구회로부터 연구기관 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다음년도 예산심사, 경영혁신 시책 등에 활용한다.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연구기관 평가결과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는데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육성 및 관리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된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5).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원·육성·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를 한다. 연구기관 평가결과는 기획평가위원회 기획총괄위원회, 이사회 평가분과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다. 기획평가위원회(기획총괄위원회)는 연구회의 평가업무에 관한 계획,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구성된 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업무에 관한 상설 지원기구이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5).

3) 평가기준 개선팀/ 연구기관 평가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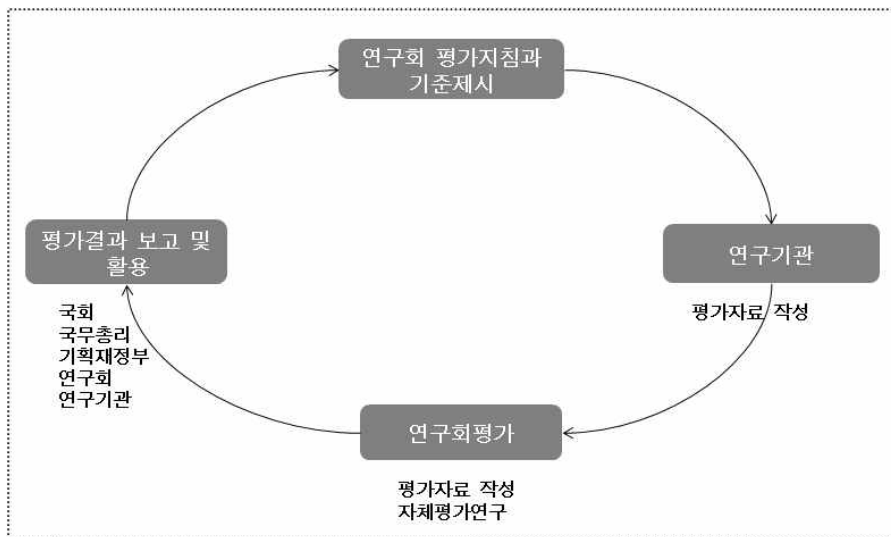
평가기준 개선팀은 전년도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새로운 평가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구성한 임시조직을 말한다. 또한 연구기관 평가단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법령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게 실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구성한 임시조직이다. 두 조직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5).

연구기관 평가단은 ①개발된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와 평가방법에 관한 자체연수, ②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와 자체평가연구결과서를 검토하는 서면평가, ③현장확인을 위한 현지방문(평가), ④평가결과서를 작성, ⑤평가내용을 종합분석 등을 통하여 기관별 개선·발전방향 및 연구회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직접 보고한 후 해산된다(엄준용·조홍순, 2007).

5. 평가절차와 방법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그림 3-2>의 평가모형에 따라 평가한다. 우선 연구회의 평가지침과 기준이 제시되면 연구기관에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보고, 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서면, 실사평가)를 한다. 평가결과는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육성 및 관리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된다.

<그림 3-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모형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www.nrcs.re.kr) 참조>

1) 평가지침과 기준제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평가년도 1년 전에 평가편람(평가지침과 기준제시)을 의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하여 연구기관에 제시한다. 평가편람에는 평가년도의 평가목적,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점부여기준, 평가내용, 평가자료 양식, 실적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

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5).

2) 연구기관 평가자료 작성

연구회의 평가편람에 기반하여 소관 연구기관은 「실적보고서」를 작성한다. 즉 실적보고서에는 반드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기관의 실적과 평가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평가편람에서 제시된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실적보고서에는 연구기관의 설립목적과 주요 사업 및 기능, 연구기관의 연혁, 조직 및 인원, 예산, 시설 현황, 연구사업실적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자료 작성이 끝나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5).

3) 연구회 평가실시

연구회는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确定的한 평가기준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 및 경영내용을 서면검토한 후, 실사평가 과정을 거쳐 해당 연구기관의 평가지표별 평점을 부여한다. 평가지표별 복수의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은 평가의견서, 실사평점표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실사평가는 대체적으로 기관장과의 대화, 연구기관에 대한 현황청취, 평가실시의 순서로 진행된다. 연구기관 평가단에서确定的한 연구기관 평가결과는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기획총괄위원회와 이사회 평가분과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이确定되면,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5).

6. 평가내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매년 평가지표는 조금씩 변화되어 왔지

만, 평가내용은 크게 연구분야 평가, 경영분야 평가를 중심으로 성과지표와 관리지표를 절대평가 한다. 연구분야의 경우, 연구사업 선정의 적정성, 연구사업 추진 및 관리체계의 효율성, 연구분야별 전문화의 정도, 연구사업 성과의 우수성,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의 정도 등이 주요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영분야의 경우에는 경영목표의 설정 및 달성의 정도,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예산 및 재정 관리의 적절성, 혁신을 위한 노력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된 평가항목이었다(엄준용·조홍순, 2007).

2015년도 연구기관 평가는 연구분야(770점), 경영분야(23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다. 또한 평가항목별 평가지표와 평가내용의 배점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표 3-2> 2015년도 연구기관 평가내용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내용) | 배점 | |
|------|---------------|----------------------|----------------------------|----------|------------------|
| | | | | 요소 배점 | 항 목 소 계 |
| 연구분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 등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 320 | 360 |
| | |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 의심 여부 | 40 | |
| | 국가정책 지원 성과 | 연구기관의 정부 과제 지원 성과 | 국정과제 수행 연구·사업 실적과 성과 | 50 | 370 |
| | |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 정도 | 15 | |
| | |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 15 | |
| | | 연구과제의 정책 | 연구과제의 정책수립 기 | 160-260 | |

| | | | | | |
|-------|------------|-------------------|---------------------------------|-------|----|
| | | 수립 지원 성과 | 여도 | | |
| | | | 선도과제의 정책수립 기여도 | | |
| | | 정책 집행사업 지원 성과 |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 0-100 | |
| |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20 | |
| | |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10 | |
| | 연구 관리 |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5 | 40 |
| | | | 연구과제 수행·관리의 적정성 | 5 | |
| | |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체계 및 실적의 우수성 | 5 | |
| | |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 5 | |
| | | | 정부3.0 추진 성과 정도 | 5 | |
| | | |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 5 | |
| | | 연구역량의 국제화 정도 | 연구역량의 국제화 정도와 성과 | 10 | |
| | 소계 | | | 770 | |
| 경영 분야 | 리더십 및 책임경영 | 리더십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5 | 50 |
| | | | 대내·외적 소통 능력 | 5 | |
| | | | 윤리경영 | 5 | |
| | | 책임경영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 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 목표 달성도 | 5 | |
| | | | 책임경영 이행 정도 | 10 | |
| | | 자율지표 | 기관고유사업 수행과제 | 20 | |
| | | | | | |

| | | | | |
|-----------------------|--|---------------------------------------|----|----|
| | | 기관장 중점 추진과제 | | |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조직 및 인적 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15 | 85 |
| | | 조직 구성원의 역량 및 유연근무 확대 | 10 | |
| |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 시스템 이행 정도 | 10 | |
| | | 연구기관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 15 | |
| | | 노사관계 선진화 | 10 | |
| | 복리후생 제도의 합리성 |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실적 정도 | 17 | |
| | | 복무·인사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실적 정도 | 8 | |
| | | | | |
| 보수 및 예산관리 | 예산운용의 적 정성 | 전략적 연구사업비 운용 | 5 | 50 |
| | |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 15 | |
| | 보수체계의 적 정성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 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20 | |
| | |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정성 | 10 | |
|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등 지적 사항 및 연구 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 10 | 10 |
| 사 회 적 배려 |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8 | 35 |
| |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5 | |
| |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7 | |

| | | | | |
|-----------------|---------------|----------------------------------|----|-------|
| | | 휴가장려 및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운영의 적정성 | 5 | |
| |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 력 정도 | 10 | |
| 소계 | | | | 230 |
| 합계(연구분야 + 경영분야) | | | | 1,000 |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5) 참조>

제2절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성과의 정책반영 문제점 분석

1. 연구과제중심운영체제(PBS) 하에 연구성과 관련 문제점

연구과제중심운영체제(PBS, Project Base System)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특정연구사업 등의 연구사업에 적용되는 예산제도이다. 즉 연구사업 기획, 예산배분, 수주 및 관리 등 연구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서 프로젝트(연구 또는 사업과제) 단위를 중심으로 경쟁체제에 의하여 운영·관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책임자는 스스로 자신의 연구과제를 섭외하거나 연구과제 수주경쟁에 참여하여 연구과제를 확보해야 한다(김계수·이민형, 2005).

정부는 PBS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부처의 예측성과 감독에서 벗어나 기관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수행의 자율성을 확보하며, 연구개발 사업 관리에 있어서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주경쟁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PBS제도를 연구사업의 경쟁적 수주체제나 내부 성과급 제도의 일부로 인식하게 되었다. 즉 연구기관장이 수탁사업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하고자 연구책임자의 수탁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차등적 성과보상 제도를 운영하였다. 그에 따라 연구내용과 성과보다 경쟁적으로 수주활동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등 창의적인 연구를 저해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단기적인 성과위주의 연구에 집중하게 되어 기본과제를 소홀히 하고 연구의 질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전체 연구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성과 평가체제 관련 문제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소관 연구기관을 평가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3가지 중요한 쟁점사항이 있다. 첫째, 평가체제에 관한 쟁점사항이다. 성격이 다른 기관, 즉 경제분야 연구기관과 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을 일률적인 평가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특성이 다른 연구사업, 즉 연구분야와 경영분야를 정량적인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평가단의 구성의 적절성에 관한 쟁점사항이다. 평가단을 외부평가자로만 구성할 것인가 연구기관 출신의 평가자를 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연구기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후자의 경우 연구기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만 평가자가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평가주기에 관한 쟁점사항이다. 연구회가 매년 평가지표를 수정·보완하고 있지만 평가를 매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 격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중장기 대형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매년 평가하는 것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평가주기가 너무 길게 되면 평가결과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예산운영에 반영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연구 기관장의 취임 및 임용과 새로운 변화가 있는 시기에 구체적인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3가지 쟁점사항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평가체제의 문제가 정책반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 비판적 검토

앞서 현행 연구성과와 관련된 제도와 평가시스템의 문제점이 정책 반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과제중심운영체제(PBS)의 경우, 예산제도와 연구환경의 변화가 연구자의 인식을 변화시켰고 연구방식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평가체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PBS제도의 도입으로 연구자의 창의적인 연구활동이

저해되고, 단기적인 성과위주의 연구에 집중되어 전체 연구 질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다. 김계수·이민형(2005)에서 PBS제도에 대한 인식에 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유효응답자 180명 중 131명이 PBS제도를 연구사업의 경쟁적 수주체제라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로 미루어 연구자들이 PBS제도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과제의 성격(유형) 및 연구성과물의 우수성을 정책반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체제의 경우, 연구평가 실시 주기는 ‘연구과제의 성격과 리더십 및 경영의 변화에 따라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준용·조홍순(2007)에서 중장기 대형 연구과제를 지향하고 있는 연구회의 방침을 고려해 볼 때, 중장기 대형 연구과제를 매년 평가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연구 기관장의 취임 및 임용과 같이 경영상의 새로운 변화가 있는 시기에는 구체적인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매년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구과제의 성격(유형), 기관장의 리더십 및 경영을 정책반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제4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가설 설정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개인수준, 조직수준, 환경 및 제도적 수준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분야성과와 경영분야성과 별로 정책반영에 미치는 요인에 관해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표 4-1> 연구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분 석 수 준 | 영향요인 | 연구문헌 |
|------------------|--|--|
| 개 인 수 준 | 직무만족, 성과불만족, 내적동기, 인사, 지각된 성과 요소, 연구자의 연령, 연구경험,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적 배경, 의사결정자의 변화지향성, 변화주도자 및 관리자의 지위와 역할 등 | Lewis and Becker(1979), Clark and Lewis(1985), Bell and Seater(1980), Braxton and Bayer(1986), Creswell(1986), Levin and Stephan(1989), Tien and Blackburn(1996), Pierce & Delbecq(1977), Daft(1982), Baldrige & Burnham(1975) |
| 조 직 수 준 | 조직 구조적 측면(전문화, 분화(differentiation), 탈집권화, 공식화, 계층화 등), 조직크기, 조직연령, 기관의 명성(prestige of institution), 조직문화 등 | Reskin(1977), Long et al.(1979), Chubin et al.(1981), Long and Mc Ginnis (1 9 8 1) , Creswell(1986), Pierce & Delbecq(1977), Daft(1982), |

| | | |
|-------------|--|---|
| | | Baldrige & Burnham(1975) |
| 환경 및 제도적 수준 | 연구환경의 특성(이질성, 불확실성, 변화, 적절한 경쟁 환경 조성 등), 고객/공동체 요소, 조직간 상호의존성, 조직간 관계 및 협력과 네트워크, 협력의 수, 협력의 존속기간(duration of collaboration), 개인연구자들에 대한 연구자금(research grants) 지원 체계 등 | Mellin and Persson(1996), Katz and Martin(1997), Pravdic and Oluic-Vukovic(1986), Porac et al.(2004), Stephan(1996), Godin(2003), Lee and Bozeman(2005), Pierce & Delbecq(1977), Daft(1982), Baldrige & Burnham(1975) |

<출처 : 김권식·이광훈, 2014 재인용; 이민형, 2003;

길종백·염재호, 2008; 김이수·조만형, 2009; 왕재선·김서용, 2009>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연구기관의 전문성은 학습조직으로서의 특성, 즉 정보의 생산과 배분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결정에 요구되는 정보의 탐색 능력을 높임으로써 문제의 인식을 보다 명확하게 하며, 구성원 개개인이 보유한 유무형의 지식을 공유가능한 지식으로 전화시키고 축적할 수 있는 역량에 좌우될 수 있다(Nonaka, 1991). 또한 유능한 인재의 수용여부 및 자율적이고 창의적 연구 분위기가 마련되어 탁월한 연구결과를 내고 있는지 여부(황윤원, 2006)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광훈 외, 2014). 그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분야성고가 우수할수록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분야성고가 우수할수록 정책반영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1-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우수할수록 정책반영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1-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부과제 지원성고가 높을수록 정책반영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1-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협동연구 추진정도가 좋을수록 정책반영도가 높을 것이다.

정부부처-출연연 거버넌스(지배구조)에 있어, 유관부처 산하에 싱크탱크를 두는 직접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한 연구회 소관으로 연구기관들을 위치시키는 엮임(umbrella)형 지배구조로 전환되었다(김용훈·오영균, 2008). 그 이유는 정부부처나 상급기관의 과도한 간섭없이 연구기관장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율적인 의사와 능력으로 조직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책연구원의 기관장에 역량 있는 인재를 충원하기 위하여 원장공모제를 실시함으로써, 기관 내부 연구인력 외에 학계나 정부 부문 출신 인사들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모과정을 거쳐 선출되는 연구 기관장이 조직의 리더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냐에 따라 조직성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이광훈 외, 2014). 따라서 연구자가 보다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받는데 연구분야성과만큼 기관장의 리더십 및 책임이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분야성과가 우수할수록 정책반영 되는 정도도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분야성과가 우수할수록 정책반영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2-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리더십이 우수할수록 정책반영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2-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책임경영정도가 강할수록 정책반영도가 높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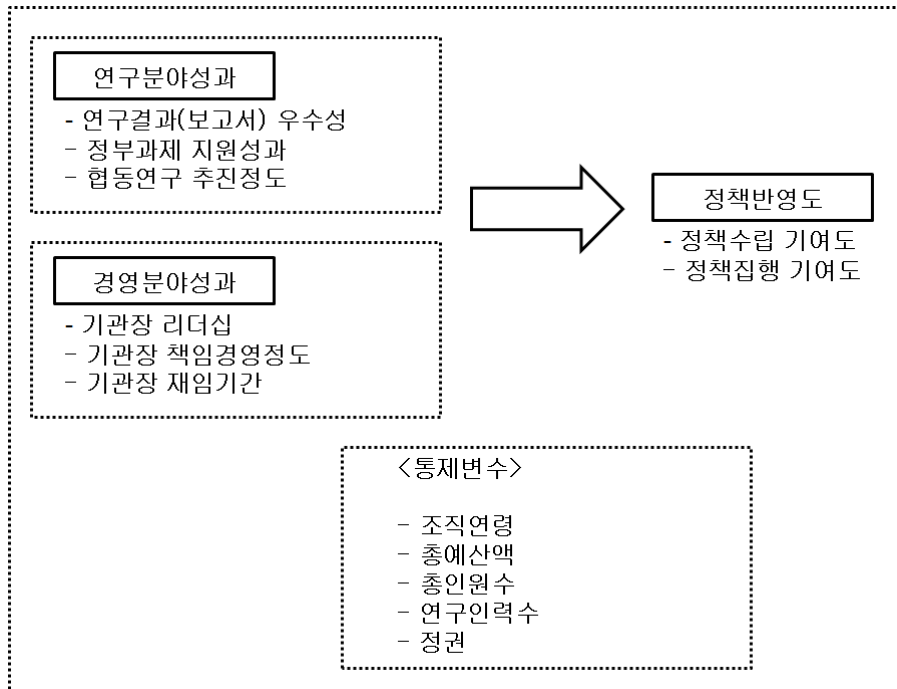
가설2-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재임기간이 길수록 정책반영도가 높을 것이다.

제2절 연구설계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성과와 정책반영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앞서 살펴본 정책, 정책지식, 연구성과, 성과체제,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성과라는 정책수단이 정책반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연구의 분석틀



2.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 정책반영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정책반영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소관 연구기관 성과평가 항목 중에 「연구과제의 정책수립 지원 성과」의 ‘연구과제의 정책수립 기여도’, ‘선도과제의 정책수립 기여도’와 「정책집행사업 지원 성과」의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점수를 합산한 값으로 한다³⁾.

2) 독립변수 : 연구분야성과, 경영분야성과

① 독립변수1 : 연구분야성과

본 연구의 독립변수1은 연구분야성과로 연구보고서 우수성, 정부과제 지원성과, 협동연구 추진정도로 한다. 첫째, 연구보고서는 경영·인문사회연구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소관 연구기관 성과평가 항목 중에 ‘연구보고서(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 등) 우수성’의 점수를 활용한다. 이는 연구보고서의 정량화된 질적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과제 지원성과는 ‘국정과제 수행 연구·사업 실적과 성과’, ‘정부 현안과제 대한 대응정도’의 점수를 합산한 값을 활용한다. 이는 정부과제 지원성과가 클수록(국정과제 및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실적이 높을수록) 정책반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셋째, 협동연구 추진정도는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체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성과평가 항목의 용어에 차이가 조금씩 존재하였다. 그러나 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정도의 차이라고 판단하였다. 가령 2005년에 정책반영을 ‘국가차원의 비전 및 정책대안 제시’라는 항목으로 산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항목을 2005년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간하는 성과평가 항목의 점수를 활용해 변수를 정의한 독립변수도 이와 같은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계 및 실적의 우수성' 점수를 활용한다. 협동연구 추진정도가 클수록 중장기적인 과제일 확률이 크고 이는 정책반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② 독립변수2: 경영분야성과

본 연구의 독립변수2은 경영분야성과로 기관장 리더십, 기관장 책임경영정도, 기관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첫째, 기관장 리더십은 경영·인문사회연구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소관 연구기관 성과평가 항목 중에 「리더십」의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대내·외적 소통 능력'의 점수를 합산한 값으로 활용한다. 기관장의 리더십에 따라 조직의 성과가 차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관장 책임경영정도는 경영·인문사회연구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소관 연구기관 성과평가 항목 중에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책임경영 이행 정도',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정도'의 점수를 합산한 값으로 활용한다. 이는 기관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노력을 달성했을수록 기관의 역량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내부적으로는 공표한 어젠다를 실현하고 외부적으로는 지적사향을 수정하여 본질적으로는 기관의 역량을 높였기 때문에 정책반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셋째, 기관장 재임기간은 원장 최초 임용일로부터 평가년도 12월 31일까지의 재임 일수(일)로 한다. 이는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리더십의 전문성을 대표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조직연령, 총예산액, 총인원수, 연구인력수, 정권이다. 공공조직의 경우 정치적·제도적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적 차원의 정권별 더미변수로서 진보정권

시기(노무현정부)와 보수정권시기(이명박정부 및 박근혜정부)를 구분하였다. 조직연령은 조직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존속연수로 측정하였다. 또한 조직의 규모를 통제하기 위하여 총예산액과 총인원수를 사용하였으며,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전담인력의 수(조희진·조근식, 2013)를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이광훈 외, 2014).

<표 4-2> 변수의 정의 및 조작화

| | 변수명 | 조작화(단위) | 기간 |
|----------|------------|--------------------------------------|-----------|
| 종속 변수 | 정책반영도 | 정책수립 및 집행에 기여한 정도, 백점 만점으로 환산(점) | 2005-2014 |
| | 연구보고서 우수성 | 조직이 산출한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백점 만점으로 환산(점) | 2005-2014 |
| 독립 변수 | 정부과제 지원성과 | 정부국정과제의 수행 및 성과 정도, 백점 만점으로 환산(점) | 2005-2014 |
| | 협동연구 추진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정도, 백점 만점으로 환산(점) | 2005-2014 |
| | 기관장 리더십 | 기관장의 리더십 정도, 백점 만점으로 환산(점) | 2005-2014 |
| | 기관장 책임경영정도 | 기관장의 책임경영 정도, 백점 만점으로 환산(점) | 2005-2014 |
| | 기관장 재임기간 | 원장 최초 임용일부터 평가년도 12월 31일까지의 재임 일수(일) | 2005-2014 |
| 통제 변수 | 조직연령 | 조직의 존속기간 = 평가기 준연도-기관설립연도+1년 | 2005-2014 |
| | 총예산액 | 각 연구기관의 연도별 예산 총액(백만원, 로그) | 2005-2014 |
| | 총인원수 | 총 인원수(명, 로그) | 2005-2014 |
| | 연구인력수 | 연구전담인력 수(명, 로그) | 2005-2014 |

| | | | |
|--|----|------------------------------|-----------|
| | 정권 | 진보정권시기와 보수정권 시기로 구분(더미변수) | 2005-2014 |
|--|----|------------------------------|-----------|

<출처 : 이광훈, 2014 재인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참조 >

3. 연구의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조직의 연구분야성과와 경영분야성과의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연구분야성과 변수는 연구보고서 우수성, 협동연구 추진정도이고, 경영분야성과 변수는 기관장 리더십, 기관장 책임경영정도, 기관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기타 통제 변수는 조직연령, 조직규모, 조직환경 등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연구가설에서 제시한 독립변수 중 정부과제 지원성과가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서 제외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간하는 「평가보고서」에 정부과제 지원성과가 2013년과 2014년 자료만 존재하였고, 존재하더라도 다른 독립변수 값이 없는 기관도 존재하여 많은 결측치가 있었다. 따라서 결측치를 그대로 사용하면, 추정량의 비효율성이 생길 수 있고 추정해야 할 모수의 식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검증의 오류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기 위해 분석모형에서 정부과제 지원성과 변수를 제외시켰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odel]

$$Y = \alpha + \beta_1 \text{Research} + \beta_2 \text{Cooperation} + \beta_3 \text{Leadership} + \beta_4 \text{Responsibility} + \beta_5 \text{Career} + \beta_6 \text{Age} + \beta_7 \text{Budget} + \beta_8 \text{Number} + \beta_9 \text{Researcher Number} + \delta \text{Administration} + \varepsilon$$

Y: 정책반영, $\beta_1 \text{Research}$: 연구보고서 우수성, $\beta_2 \text{Cooperation}$:

협동연구 추진정도, β_3 Leadership: 기관장 리더십, β_4 Responsibility: 기관장 책임경영정도, β_5 Career: 기관장 재임기간, β_6 Age: 조직연령, β_7 Budget: 총예산액, β_8 Number: 총인원수, β_9 Researcher Number: 연구인력수, δ Administration: 정권, ε : 오차항

4. 연구방법

주요 연구자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발간하는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소관연구기관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2005-2014년 10년 간의 성과평가를 평가하는 패널 데이터이다.

주요 연구방법은 가설검증을 위한 패널분석이다. 패널데이터는 시계열데이터와 횡단면데이터를 하나로 합쳐 놓은 것으로 조사대상의 동적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정보와 변수를 제공함으로써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민인식·최필선, 2012). 그 외에도 패널데이터는 개별관측치간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누락된 변수문제(omitted variables problem)를 교정할 수 있다(김권식·이광훈, 2014). 패널분석의 대표적인 모형으로 독립변수와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의 여부에 따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이 있다. 이 두 가지 모형에 대해 하우스만검정(Hausman-test)을 한 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패널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에 대해 기존연구와의 비교 및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제5장 분석결과

제1절 기술통계 분석⁴⁾

1. 종속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종속변수 정책반영에 관한 기술통계의 분석결과는 <표 5-1>과 같다. 정책반영의 평균값은 85.46점이고, 표준편차는 7.11점이다.

<표 5-1> 종속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 변수 | N | 평균값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정책반영 | 230 | 85.46 | 7.11 | 60 | 97.78 |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참조>

1) 기관별 종속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기관별 종속변수 정책반영에 관한 기술통계의 분석결과는 <표 5-2>와 같다. 정책반영에 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89.58점)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한국행정연구원(79.34점)이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정책반영에 관해 80점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기관별 종속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를 참조하였으며, 평가자료에 결측치가 있을 경우 결측치를 그대로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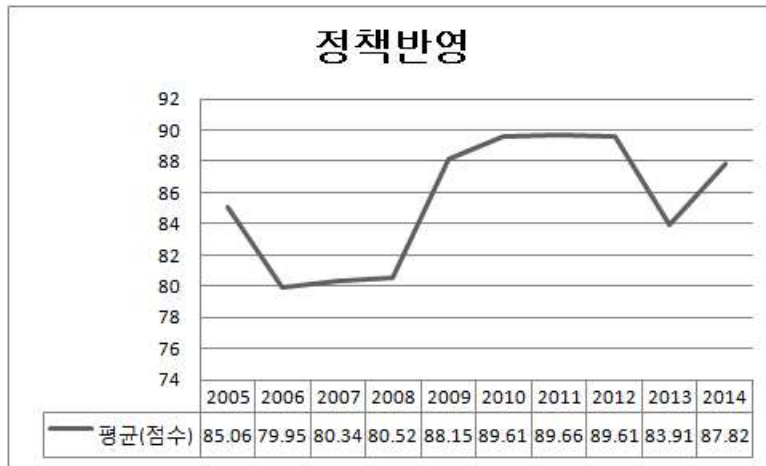
| 변수 | 연구기관 | N | 평균값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정책반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0 | 85.04 | 7.58 | 72.88 | 95.00 |
| | 산업연구원 | 10 | 85.54 | 6.41 | 75.00 | 95.00 |
| | 한국개발연구원 | 10 | 88.99 | 5.11 | 82.50 | 95.72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0 | 82.06 | 7.26 | 72.14 | 95.00 |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10 | 84.49 | 9.78 | 64.98 | 95.00 |
| | 국토연구원 | 10 | 87.65 | 7.73 | 74.28 | 95.00 |
| | 에너지경제연구원 | 10 | 88.03 | 6.61 | 75.00 | 95.42 |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0 | 86.56 | 4.97 | 79.02 | 94.29 |
| | 한국교통연구원 | 10 | 87.61 | 5.15 | 77.00 | 95.00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0 | 85.28 | 9.31 | 65.71 | 95.00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0 | 89.58 | 3.42 | 85.00 | 95.00 |
| | 한국교육개발원 | 10 | 85.59 | 7.27 | 70.58 | 95.00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0 | 83.96 | 5.72 | 71.96 | 91.00 |
| | 한국노동연구원 | 10 | 85.25 | 6.05 | 75.00 | 94.29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0 | 88.67 | 5.66 | 82.50 | 97.78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0 | 84.20 | 2.27 | 80.00 | 87.00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0 | 86.48 | 5.50 | 76.67 | 93.19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0 | 80.89 | 6.21 | 70.00 | 87.00 |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0 | 86.34 | 9.49 | 65.70 | 95.00 |
| | 통일연구원 | 10 | 80.78 | 8.48 | 65.00 | 91.00 |
| | 한국법제연구원 | 10 | 88.75 | 5.48 | 80.00 | 97.18 |
| | 한국행정연구원 | 10 | 79.34 | 11.36 | 60.00 | 91.00 |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0 | 84.56 | 5.12 | 74.28 | 91.00 |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참조>

2) 연도별 종속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연도별 종속변수 정책반영에 관한 기술통계의 분석결과는 <그림 5-1>과 같다. 정책반영에 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연도는 2011년(89.66점)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연도는 2006년(79.95점)이었다. 연도별로 종속변수의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1> 연도별 종속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참조>

2. 독립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독립변수 연구보고서 우수성, 정부과제 지원성과, 협동연구 추진정도, 기관장 리더십, 기관장 책임경영정도, 기관장 재임기간에 관한 기술통계의 분석결과는 <표 5-3>과 같다. 연구보고서 우수성의 평균값은 87.48점, 표준편차는 4.76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과제 지원성과의 평균값은 87.90점, 표준편차는 4.73점을 갖는다. 협동연구 추진정도의 평균값은 83.10점, 표준편차는 9.43점이다. 기관장 리더십의 평균값은 80.59점, 표준편차는 11.02점을 나타내고 있다. 기관장 책임경영정도의 평균값은 82.81점, 표준편차는 10.05점을 갖는다. 기관장 재임기간의 평균값은 559.62일, 표준편차는 421.69일이다.

독립변수 중 연구보고서 우수성 변수와 정부과제 지원성과 변수는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표준편차)’가 비교적 다른 독립변수에 비해 작은 것으로 보아 비슷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관장 리더십 변수가 다른 독립변수보다 평균값이 가장 작는데 이를 통해 기관장 리더십 변수가 다른 독립변수에 비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과제 지원성과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자료가 2개년(2013년, 2014년)만 존재하였다.

<표 5-3> 독립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 변수 | N | 평균값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연구보고서 우수성 | 230 | 87.48 | 4.76 | 75 | 99.7 |
| 정부과제 지원성과 협동연구 추진정도 | 46 | 87.90 | 4.73 | 82.5 | 95 |
| 기관장 리더십 | 144 | 80.59 | 11.02 | 55 | 100 |
| 기관장 책임경영정도 | 230 | 82.81 | 10.05 | 55 | 97.33 |
| 기관장 재임기간 | 230 | 559.62 | 421.69 | 0 | 2111 |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참조>

1) 기관별 독립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① 기관별 연구보고서 우수성에 관한 기술통계

기관별 독립변수 연구보고서 우수성에 관한 기술통계의 분석결과는 <표 5-4>와 같다. 연구보고서 우수성에 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92.57점)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84.42점)이었다. 9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 외에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90.83점), 한국법제연구원(90.23점)이 있었다. 대체로 기관별 연구보고서 우수성에 관

한 평균이 다른 변수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4> 기관별 연구보고서 우수성에 관한 기술통계

| 변수 | 연구기관 | N | 평균값 | 표준 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연구보고서 우수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0 | 87.86 | 4.47 | 82.50 | 95.00 |
| | 산업연구원 | 10 | 85.19 | 4.41 | 75.00 | 90.08 |
| | 한국개발연구원 | 10 | 86.28 | 2.77 | 82.50 | 90.60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0 | 89.51 | 4.80 | 82.50 | 95.00 |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10 | 87.09 | 4.23 | 82.50 | 95.00 |
| | 국토연구원 | 10 | 89.02 | 4.90 | 82.50 | 95.00 |
| | 에너지경제연구원 | 10 | 86.36 | 2.89 | 82.50 | 91.06 |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0 | 84.42 | 3.73 | 75.00 | 89.34 |
| | 한국교통연구원 | 10 | 92.57 | 4.70 | 82.50 | 95.00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0 | 88.71 | 5.29 | 82.50 | 95.00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0 | 88.12 | 4.45 | 82.50 | 95.00 |
| | 한국교육개발원 | 10 | 86.83 | 3.70 | 82.50 | 95.00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0 | 86.13 | 3.78 | 82.50 | 95.00 |
| | 한국노동연구원 | 10 | 86.79 | 6.10 | 75.00 | 95.10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0 | 88.00 | 4.88 | 82.50 | 96.82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0 | 84.99 | 1.32 | 82.50 | 87.32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0 | 85.73 | 3.75 | 82.50 | 95.86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0 | 85.11 | 4.98 | 75.00 | 95.00 |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0 | 88.34 | 6.04 | 82.50 | 99.70 |
| | 통일연구원 | 10 | 87.29 | 4.47 | 82.50 | 95.00 |
| | 한국법제연구원 | 10 | 90.23 | 5.17 | 82.50 | 95.00 |
| | 한국행정연구원 | 10 | 86.55 | 5.11 | 79.58 | 95.00 |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0 | 90.83 | 4.96 | 82.50 | 95.00 |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참조>

② 기관별 정부과제 지원성파에 관한 기술통계

기관별 독립변수 정부과제 지원성파에 관한 기술통계의 분석결과
는 <표 5-5>와 같다. 우선 정부과제 지원성파 점수는 2013년, 2014

년만 존재하였다. 정부과제 지원성과에 관해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일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이었다. 반면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었다. 대체로 기관별 정부과제 지원성과에 관한 평균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5-5> 기관별 정부과제 지원성과에 관한 기술통계

| 변수 | 연구기관 | N | 평균값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정부과제지원성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 | 84.91 | 3.40 | 82.50 | 87.31 |
| | 산업연구원 | 2 | 85.32 | 0.45 | 85.00 | 85.63 |
| | 한국개발연구원 | 2 | 88.44 | 4.86 | 85.00 | 91.88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 | 83.75 | 1.77 | 82.50 | 85.00 |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 | 85.32 | 0.45 | 85.00 | 85.63 |
| | 국토연구원 | 2 | 83.75 | 1.77 | 82.50 | 85.00 |
| | 에너지경제연구원 | 2 | 90.00 | 7.07 | 85.00 | 95.00 |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 | 83.75 | 1.77 | 82.50 | 85.00 |
| | 한국교통연구원 | 2 | 90.00 | 7.07 | 85.00 | 95.00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 | 83.75 | 1.77 | 82.50 | 85.00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 | 88.44 | 4.86 | 85.00 | 91.88 |
| | 한국교육개발원 | 2 | 85.32 | 0.45 | 85.00 | 85.63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 | 88.44 | 4.86 | 85.00 | 91.88 |
| | 한국노동연구원 | 2 | 95.00 | 0.00 | 95.00 | 95.00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 | 95.00 | 0.00 | 95.00 | 95.00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 | 90.00 | 7.07 | 85.00 | 95.00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 | 90.00 | 7.07 | 85.00 | 95.00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 | 88.44 | 4.86 | 85.00 | 91.88 |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 | 84.91 | 3.40 | 82.50 | 87.31 |
| | 통일연구원 | 2 | 95.00 | 0.00 | 95.00 | 95.00 |
| | 한국법제연구원 | 2 | 90.00 | 7.07 | 85.00 | 95.00 |
| | 한국행정연구원 | 2 | 88.44 | 4.86 | 85.00 | 91.88 |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 | 83.75 | 1.77 | 82.50 | 85.00 |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참조>

③ 기관별 협동연구 추진정도에 관한 기술통계

기관별 독립변수 협동연구 추진정도에 관한 기술통계의 분석결과는 <표 5-6>과 같다. 우선 협동연구 추진정도에 관한 2009년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연구 추진정도에 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88.61점)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76.11점)이었다. 80점 이하 받은 기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외에도 통일연구원(76.19점), 한국행정연구원(78.69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79.76점)이 있었다.

<표 5-6> 기관별 협동연구 추진정도에 관한 기술통계

| 변수 | 연구기관 | N | 평균값 | 표준 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협 동 연 구 추 진 정 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9 | 85.56 | 5.97 | 80.00 | 95.00 |
| | 산업연구원 | 9 | 86.67 | 10.31 | 70.00 | 100.00 |
| | 한국개발연구원 | 9 | 84.17 | 10.08 | 67.50 | 100.00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9 | 86.71 | 8.76 | 70.00 | 95.00 |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9 | 81.39 | 13.24 | 65.00 | 100.00 |
| | 국토연구원 | 9 | 82.26 | 8.82 | 65.00 | 95.00 |
| | 에너지경제연구원 | 9 | 81.39 | 12.06 | 60.00 | 95.00 |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9 | 85.83 | 11.39 | 67.50 | 100.00 |
| | 한국교통연구원 | 9 | 85.87 | 6.51 | 75.00 | 95.00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9 | 82.50 | 10.61 | 65.00 | 95.00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9 | 88.61 | 6.74 | 80.00 | 95.00 |
| | 한국교육개발원 | 9 | 84.17 | 7.71 | 70.00 | 95.00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9 | 84.48 | 5.72 | 75.00 | 95.00 |
| | 한국노동연구원 | 9 | 85.52 | 5.91 | 75.00 | 95.00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9 | 80.87 | 7.85 | 70.00 | 95.00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9 | 76.11 | 9.36 | 65.00 | 95.00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9 | 83.06 | 8.99 | 70.00 | 95.00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9 | 79.76 | 9.13 | 65.00 | 95.00 |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9 | 86.15 | 5.89 | 80.00 | 95.00 |

| | | | | | | |
|--|-----------|---|-------|-------|-------|--------|
| | 통일연구원 | 9 | 76.19 | 11.82 | 65.00 | 100.00 |
| | 한국법제연구원 | 9 | 83.61 | 10.98 | 67.50 | 100.00 |
| | 한국행정연구원 | 9 | 78.69 | 12.14 | 65.00 | 100.00 |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9 | 81.67 | 9.44 | 60.00 | 95.00 |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참조>

④ 기관별 기관장 리더십에 관한 기술통계

기관별 독립변수 기관장 리더십에 관한 기술통계의 분석결과는 <표 5-7>과 같다. 우선 기관별로 기관장 리더십의 점수가 존재하는 연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관장 리더십에 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산업연구원(88.00점)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70.12점)이었다. 대체로 기관별 기관장 리더십에 관한 평균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5-7> 기관별 기관장 리더십에 관한 기술통계

| 변수 | 연구기관 | N | 평균값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기관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6 | 79.31 | 8.44 | 70.84 | 95.00 |
| | 산업연구원 | 7 | 88.00 | 5.60 | 80.00 | 95.00 |
| | 한국개발연구원 | 7 | 78.03 | 12.16 | 55.00 | 95.00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8 | 85.67 | 9.77 | 75.00 | 100.00 |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7 | 76.87 | 10.37 | 60.00 | 85.00 |
| | 국토연구원 | 6 | 84.83 | 6.94 | 75.00 | 95.00 |
| 리더십 | 에너지경제연구원 | 5 | 87.29 | 7.27 | 81.46 | 100.00 |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6 | 84.96 | 13.02 | 65.00 | 100.00 |
| | 한국교통연구원 | 6 | 86.36 | 11.04 | 72.30 | 100.00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6 | 79.42 | 7.87 | 65.00 | 85.00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6 | 80.97 | 8.79 | 65.00 | 90.83 |
| | 한국교육개발원 | 6 | 87.46 | 8.45 | 75.00 | 100.00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6 | 76.79 | 8.44 | 65.00 | 90.83 |

| | | | | | |
|------------|---|-------|-------|-------|--------|
| 한국노동연구원 | 6 | 87.84 | 14.29 | 65.00 | 100.00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7 | 83.78 | 8.09 | 75.00 | 95.00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6 | 72.54 | 12.41 | 60.00 | 90.83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6 | 76.29 | 11.16 | 65.00 | 95.00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6 | 70.12 | 12.90 | 55.00 | 90.83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7 | 83.27 | 4.59 | 77.04 | 90.83 |
| 통일연구원 | 6 | 72.20 | 13.75 | 55.00 | 85.00 |
| 한국법제연구원 | 6 | 81.89 | 15.54 | 55.00 | 100.00 |
| 한국행정연구원 | 6 | 74.66 | 10.14 | 60.00 | 85.44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6 | 73.19 | 10.39 | 60.00 | 85.00 |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참조>

⑤ 기관별 기관장 책임경영정도에 관한 기술통계

기관별 독립변수 기관장 책임경영정도에 관한 기술통계의 분석결과는 <표 5-8>과 같다. 기관장 책임경영정도에 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88.38점)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통일연구원(72.57점)이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 간의 차이가 15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8> 기관별 기관장 책임경영정도에 관한 기술통계

| 변수 | 연구기관 | N | 평균값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기관장 책임경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0 | 82.83 | 6.35 | 75.00 | 95.00 |
| | 산업연구원 | 10 | 84.60 | 9.74 | 65.00 | 95.00 |
| | 한국개발연구원 | 10 | 85.05 | 9.55 | 71.67 | 95.00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0 | 85.57 | 9.73 | 65.00 | 95.00 |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10 | 75.37 | 9.39 | 62.67 | 87.00 |
| | 국토연구원 | 10 | 80.03 | 6.85 | 67.50 | 90.00 |
| | 에너지경제연구원 | 10 | 87.53 | 8.28 | 75.00 | 97.33 |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0 | 85.98 | 9.72 | 67.00 | 96.00 |
| | 한국교통연구원 | 10 | 84.70 | 11.25 | 65.00 | 95.00 |

| | | | | | | |
|-------------|-------------|----|-------|-------|-------|-------|
| 영 정 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0 | 83.72 | 7.82 | 65.00 | 91.67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0 | 86.38 | 8.70 | 68.33 | 95.00 |
| | 한국교육개발원 | 10 | 82.23 | 12.60 | 64.50 | 95.00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0 | 84.42 | 9.77 | 65.00 | 95.00 |
| | 한국노동연구원 | 10 | 81.05 | 12.63 | 55.00 | 94.67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0 | 82.53 | 13.26 | 55.00 | 95.00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0 | 83.87 | 6.25 | 75.00 | 95.00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0 | 86.87 | 7.30 | 74.67 | 95.00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0 | 79.23 | 9.07 | 65.00 | 95.00 |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0 | 88.38 | 6.95 | 75.00 | 95.00 |
| | 통일연구원 | 10 | 72.57 | 9.73 | 55.00 | 85.00 |
| | 한국법제연구원 | 10 | 81.33 | 12.05 | 55.00 | 94.50 |
| | 한국행정연구원 | 10 | 82.53 | 12.06 | 61.33 | 95.00 |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0 | 77.93 | 11.25 | 57.33 | 91.67 |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참조>

⑥ 기관별 기관장 재임기간에 관한 기술통계

기관별 독립변수 기관장 재임기간에 관한 기술통계의 분석결과는 <표 5-9>와 같다. 기관장이 평균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재임한 기관은 산업연구원(968일)이었다. 반면 기관장이 가장 짧게 재임한 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389일)이었다. 대부분 기관의 기관장은 평균 400일-600일 정도의 재임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기관별 기관장 재임기간에 관한 기술통계

| 변수 | 연구기관 | N | 평균값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기관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0 | 755.90 | 499.23 | 149.00 | 1690.00 |
| | 산업연구원 | 10 | 968.40 | 617.51 | 233.00 | 2111.00 |
| | 한국개발연구원 | 10 | 646.70 | 431.29 | 39.00 | 1379.00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0 | 401.40 | 284.80 | 65.00 | 823.00 |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10 | 450.60 | 288.82 | 120.00 | 917.00 |
| 재 | 국토연구원 | 10 | 645.00 | 523.78 | 26.00 | 1658.00 |

| | | | | | | |
|-------------|-------------|----|--------|--------|--------|---------|
| 임 기 간 | 에너지경제연구원 | 10 | 878.80 | 614.75 | 159.00 | 2019.00 |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0 | 459.70 | 272.34 | 113.00 | 843.00 |
| | 한국교통연구원 | 10 | 446.00 | 325.02 | 78.00 | 856.00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0 | 426.00 | 290.27 | 100.00 | 902.00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0 | 718.40 | 693.76 | 94.00 | 2095.00 |
| | 한국교육개발원 | 10 | 389.60 | 312.06 | 4.00 | 818.00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0 | 728.40 | 413.15 | 224.00 | 1462.00 |
| | 한국노동연구원 | 10 | 507.00 | 434.35 | 0.00 | 1279.00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0 | 583.60 | 376.24 | 93.00 | 1213.00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0 | 492.50 | 332.37 | 93.00 | 963.00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0 | 423.50 | 325.22 | 62.00 | 850.00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0 | 494.00 | 331.30 | 78.00 | 1022.00 |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0 | 553.90 | 380.13 | 89.00 | 1223.00 |
| | 통일연구원 | 10 | 425.50 | 357.83 | 17.00 | 1079.00 |
| | 한국법제연구원 | 10 | 491.80 | 343.98 | 83.00 | 1114.00 |
| | 한국행정연구원 | 10 | 463.40 | 323.82 | 58.00 | 823.00 |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0 | 521.10 | 344.10 | 46.00 | 1096.00 |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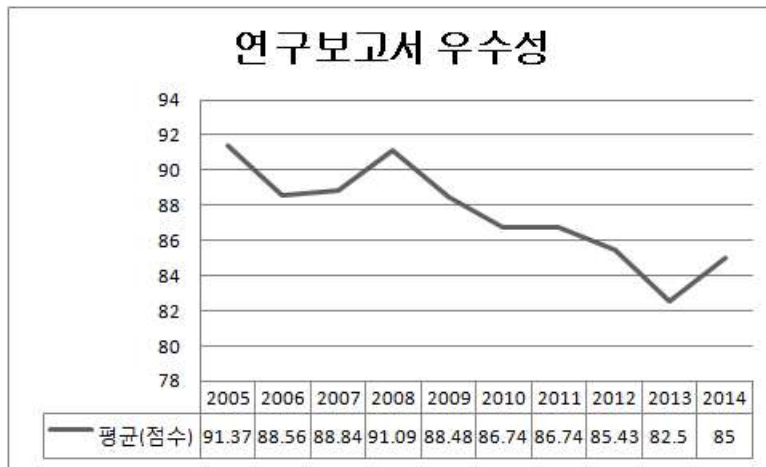
평가결과 참조>

2) 연도별 독립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① 연도별 연구보고서 우수성에 관한 기술통계

연도별 독립변수 연구보고서 우수성에 관한 기술통계의 분석결과는 <그림 5-2>와 같다. 연구보고서 우수성에 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연도는 2005년(91.37점)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연도는 2013년(82.50점)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보고서 우수성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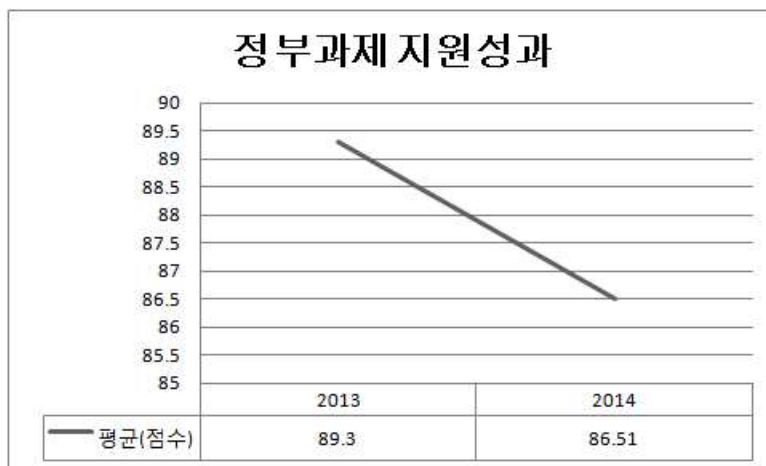
<그림 5-2> 연도별 연구보고서 우수성에 관한 기술통계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참조>

② 연도별 정부과제 지원성과에 관한 기술통계

<그림 5-3> 연도별 정부과제 지원성과에 관한 기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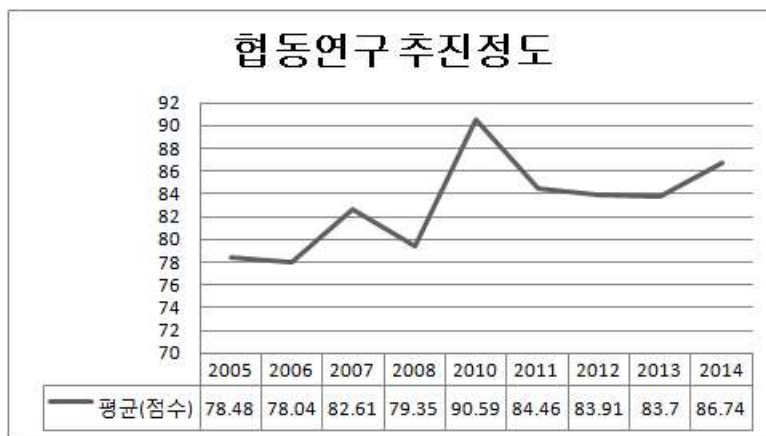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참조>

연도별 독립변수 정부과제 지원성과에 관한 기술통계의 분석결과는 <그림 5-3>과 같다. 우선 정부과제 지원성과에 관한 자료는 2013년, 2014년 2개년도 자료만 존재하였다. 정부과제 지원성과에 관해 2013년에는 평균 89.30점을, 2014년에는 평균 86.51점을 받았다.

③ 연도별 협동연구 추진정도에 관한 기술통계

연도별 독립변수 협동연구 추진정도에 관한 기술통계의 분석결과는 <그림 5-4>와 같다. 우선 협동연구 추진정도의 2009년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협동연구 추진정도에 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연도는 2010년(90.59점)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연도는 2006년(78.04점)이었다. 연도별로 협동연구 추진정도의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4> 연도별 협동연구 추진정도에 관한 기술통계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참조>

④ 연도별 기관장 리더십에 관한 기술통계

연도별 독립변수 기관장 리더십에 관한 기술통계의 분석결과는 <표 5-10>과 같다. 우선 연도별로 기관장 리더십에 관한 자료여부의 차이가 있었다. 기관장 리더십에 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연도는 2013년(90.83점)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연도는 2009년(71.50점)이었다. 연도별로 기관장 리더십의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10> 연도별 기관장 리더십에 관한 기술통계

| 변수 | 연구연도 | N | 평균값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기관장 리더십 | 2005 | 1 | 80.00 | | 80.00 | 80.00 |
| | 2006 | 23 | 80.87 | 15.35 | 60.00 | 100.00 |
| | 2007 | 23 | 80.08 | 8.30 | 65.58 | 97.04 |
| | 2008 | 23 | 85.00 | 6.74 | 75.00 | 95.00 |
| | 2009 | 20 | 71.50 | 12.26 | 55.00 | 95.00 |
| | 2010 | 23 | 74.13 | 7.33 | 65.00 | 85.00 |
| | 2011 | 0 | | | | |
| | 2012 | 0 | | | | |
| | 2013 | 15 | 90.83 | 4.17 | 82.50 | 95.00 |
| | 2014 | 16 | 85.63 | 4.79 | 80.00 | 9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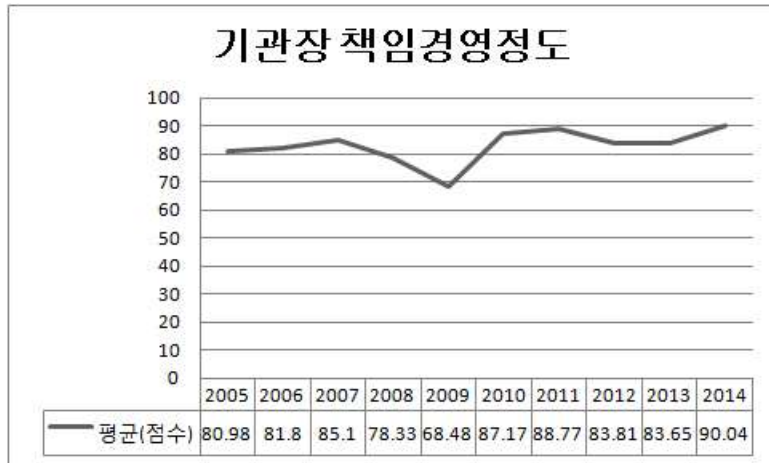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참조>

⑤ 연도별 기관장 책임경영정도에 관한 기술통계

연도별 독립변수 기관장 책임경영정도에 관한 기술통계의 분석결과는 <그림 5-5>와 같다. 기관장 책임경영정도에 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연도는 2014년(90.04점)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연도는 2009년(68.48점)이었다. 2008년, 2009년을 제외한 다른

연도에서는 기관장 책임경영정도에 관해 비슷한 평균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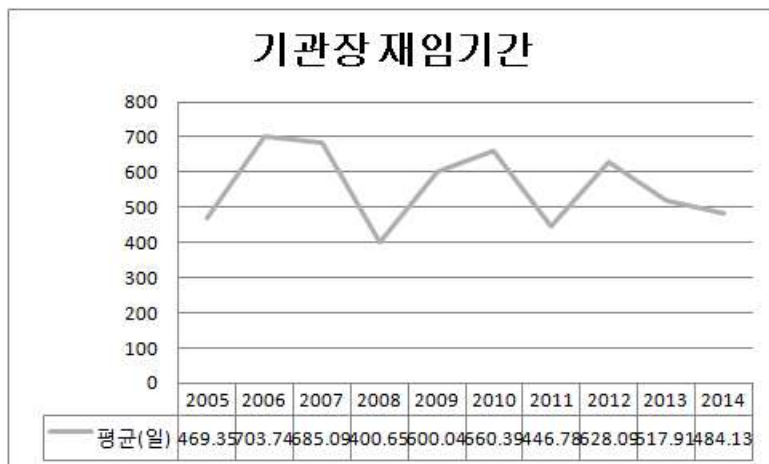
<그림 5-5> 연도별 기관장 책임경영정도에 관한 기술통계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참조>

⑥ 연도별 기관장 재임기간에 관한 기술통계

<그림 5-6> 연도별 기관장 재임기간에 관한 기술통계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참조>

연도별 독립변수 기관장 재임기간에 관한 기술통계의 분석결과는 <그림 5-6>과 같다.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평균적으로 가장 길었던 연도는 2006년(703.74일)이었다. 반면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평균적으로 가장 짧았던 연도는 2008년(400.65일)이었다.

3. 통제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통제변수 조직연령, 총예산액, 총인원수, 연구인력수, 정권에 관한 기술통계의 분석결과는 <표 5-11>과 같다. 조직연령의 평균값은 25.67년, 표준편차는 8.81년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오래된 조직은 48년, 신설조직은 8년으로 6배의 차이를 보여준다. 총예산액의 평균값은 297억 7184만원, 표준편차는 274억 9552만원이다. 최대값 1662억 2100만원, 최소값 50억 4900만원으로 기관 간 약 33배의 예산규모에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총인원수의 평균값은 183.30명, 표준편차는 93.05명이다. 최대값 445명, 최소값 36명으로 약 12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인력수의 평균값은 113.11명, 표준편차는 73.34명을 나타내고 있다. 최대값 380명, 최소값 26명으로 약 15배의 격차가 나타났다. 정권의 평균값은 0.6, 표준편차는 0.49이다.

<표 5-11> 통제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 변수 | N | 평균값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조직연령 | 230 | 25.67 | 8.81 | 8 | 48 |
| 총예산액 | 230 | 29771.84 | 27495.52 | 5049 | 166221 |
| 총인원수 | 230 | 183.30 | 93.05 | 36 | 445 |
| 연구인력수 | 230 | 113.11 | 73.34 | 26 | 380 |
| 정권 | 230 | 0.6 | 0.49 | 0 | 1 |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참조>

1) 기관별 통제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① 기관별 조직연령에 관한 기술통계

기관별 통제변수 조직연령에 관한 기술통계의 분석결과는 <표 5-12>와 같다. 연구기관 중 가장 오래된 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48년)이었다. 반면 가장 신생 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8년)이었다. 대체로 기관별 조직은 관한 평균은 20-30년 된 기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12> 기관별 조직연령에 관한 기술통계

| 변수 | 연구기관 | N | 평균값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조직연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0 | 21.50 | 3.03 | 17.00 | 26.00 |
| | 산업연구원 | 10 | 34.50 | 3.03 | 30.00 | 39.00 |
| | 한국개발연구원 | 10 | 39.50 | 3.03 | 35.00 | 44.00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0 | 43.50 | 3.03 | 39.00 | 48.00 |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10 | 18.50 | 3.03 | 14.00 | 23.00 |
| | 국토연구원 | 10 | 32.50 | 3.03 | 28.00 | 37.00 |
| | 에너지경제연구원 | 10 | 24.50 | 3.03 | 20.00 | 29.00 |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0 | 25.50 | 3.03 | 21.00 | 30.00 |
| | 한국교통연구원 | 10 | 25.50 | 3.03 | 21.00 | 30.00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0 | 26.50 | 3.03 | 22.00 | 31.00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0 | 18.50 | 3.03 | 14.00 | 23.00 |
| | 한국교육개발원 | 10 | 38.50 | 3.03 | 34.00 | 43.00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0 | 12.50 | 3.03 | 8.00 | 17.00 |
| | 한국노동연구원 | 10 | 22.50 | 3.03 | 18.00 | 27.00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0 | 39.50 | 3.03 | 35.00 | 44.00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0 | 27.50 | 3.03 | 23.00 | 32.00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0 | 13.50 | 3.03 | 9.00 | 18.00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0 | 21.50 | 3.03 | 17.00 | 26.00 |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0 | 23.50 | 3.03 | 19.00 | 28.00 |

| | | | | | |
|-----------|----|-------|------|-------|-------|
| 통일연구원 | 10 | 19.50 | 3.03 | 15.00 | 24.00 |
| 한국법제연구원 | 10 | 20.50 | 3.03 | 16.00 | 25.00 |
| 한국행정연구원 | 10 | 19.50 | 3.03 | 15.00 | 24.00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0 | 21.50 | 3.03 | 17.00 | 26.00 |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참조>

② 기관별 총예산액에 관한 기술통계

기관별 통제변수 총예산액에 관한 기술통계의 분석결과는 <표 5-13>과 같다. 기관 중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보유한 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1129억 1490만원)이었다. 반면 기관 중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적은 예산을 보유한 기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79억 7750만원)이었다. 평균적으로 기관 간 약 14배의 예산 규모에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표 5-13> 기관별 총예산액에 관한 기술통계

| 변수 | 연구기관 | N | 평균값 | 표준 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총 예 산 액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0 | 28172.90 | 8483.12 | 16294.00 | 39740.00 |
| | 산업연구원 | 10 | 25080.70 | 3325.07 | 20681.00 | 30177.00 |
| | 한국개발연구원 | 10 | 82824.10 | 51127.02 | 35983.00 | 166221.00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0 | 31742.80 | 16972.98 | 15012.00 | 60193.00 |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10 | 24908.00 | 14479.19 | 10434.00 | 52462.00 |
| | 국토연구원 | 10 | 38130.40 | 5014.66 | 29533.00 | 46544.00 |
| | 에너지경제연구원 | 10 | 22706.50 | 4893.07 | 14042.00 | 28012.00 |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0 | 31112.40 | 14017.01 | 16527.00 | 59254.00 |
| | 한국교통연구원 | 10 | 30862.90 | 11031.51 | 12907.00 | 41069.00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0 | 28144.30 | 5872.11 | 18160.00 | 35883.00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0 | 23562.30 | 8178.17 | 12552.00 | 35569.00 |
| | 한국교육개발원 | 10 | 43971.40 | 13857.81 | 29209.00 | 65718.00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0 | 112914.90 | 34236.65 | 60747.00 | 152383.00 |
| | 한국노동연구원 | 10 | 18053.20 | 3509.25 | 13152.00 | 23880.00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0 | 26143.50 | 5130.07 | 18275.00 | 31028.00 |

| | | | | |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0 | 16589.40 | 3537.25 | 11159.00 | 21334.00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0 | 32487.80 | 8181.44 | 18888.00 | 41884.00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0 | 7977.50 | 1744.78 | 5049.00 | 10267.00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0 | 15740.60 | 4154.22 | 9359.00 | 22107.00 |
| 통일연구원 | 10 | 9711.60 | 2208.70 | 6669.00 | 12116.00 |
| 한국법제연구원 | 10 | 13028.80 | 8324.01 | 5336.00 | 29050.00 |
| 한국행정연구원 | 10 | 12331.00 | 2673.59 | 8497.00 | 15558.00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0 | 8555.40 | 2204.95 | 5300.00 | 11298.00 |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참조>

③ 기관별 총인원수에 관한 기술통계

기관별 통제변수 총인원수에 관한 기술통계의 분석결과는 <표 5-14>와 같다. 기관 중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한 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371.70명)이었다. 반면 기관 중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적은 인원을 보유한 기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68명)이었다. 평균적으로 기관 간 약 5배 이상의 총인원수에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표 5-14> 기관별 총인원수에 관한 기술통계

| 변수 | 연구기관 | N | 평균값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총인원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0 | 176.70 | 28.60 | 122.00 | 206.00 |
| | 산업연구원 | 10 | 235.00 | 18.46 | 192.00 | 254.00 |
| | 한국개발연구원 | 10 | 371.70 | 44.34 | 307.00 | 425.00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0 | 188.10 | 32.04 | 158.00 | 248.00 |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10 | 149.50 | 50.37 | 96.00 | 248.00 |
| | 국토연구원 | 10 | 347.50 | 30.52 | 298.00 | 381.00 |
| | 에너지경제연구원 | 10 | 168.50 | 15.93 | 140.00 | 191.00 |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0 | 201.40 | 14.69 | 174.00 | 221.00 |
| | 한국교통연구원 | 10 | 250.90 | 41.67 | 176.00 | 296.00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0 | 190.90 | 23.65 | 161.00 | 230.00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0 | 240.10 | 38.51 | 177.00 | 301.00 |

| | | | | | |
|------------|----|--------|--------|--------|--------|
| 한국교육개발원 | 10 | 261.70 | 126.93 | 134.00 | 445.00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0 | 303.60 | 72.31 | 181.00 | 382.00 |
| 한국노동연구원 | 10 | 114.20 | 23.81 | 91.00 | 163.00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0 | 203.70 | 16.06 | 173.00 | 235.00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0 | 133.40 | 30.70 | 111.00 | 185.00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0 | 162.00 | 32.95 | 127.00 | 213.00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0 | 68.00 | 11.59 | 54.00 | 93.00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0 | 139.50 | 21.67 | 114.00 | 171.00 |
| 통일연구원 | 10 | 91.30 | 7.10 | 82.00 | 104.00 |
| 한국법제연구원 | 10 | 71.60 | 31.61 | 36.00 | 119.00 |
| 한국행정연구원 | 10 | 73.20 | 9.81 | 61.00 | 90.00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0 | 73.40 | 20.65 | 48.00 | 117.00 |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참조>

④ 기관별 연구인력수에 관한 기술통계

기관별 통제변수 연구인력수에 관한 기술통계의 분석결과는 <표 5-15>와 같다. 기관 중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인력을 보유한 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243.10명)이었다. 반면 기관 중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적은 연구인력을 보유한 기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41.80명)이었다. 평균적으로 기관 간 약 5배 이상의 총인원수에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관의 총인원수와 연구인력수가 대체적으로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15> 기관별 연구인력수에 관한 기술통계

| 변수 | 연구기관 | N | 평균값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연구인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0 | 102.90 | 27.66 | 74.00 | 143.00 |
| | 산업연구원 | 10 | 134.80 | 31.00 | 107.00 | 195.00 |
| | 한국개발연구원 | 10 | 243.10 | 80.90 | 167.00 | 360.00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0 | 124.10 | 34.37 | 98.00 | 196.00 |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10 | 108.90 | 55.92 | 61.00 | 211.00 |

| | | | | | | |
|---|-------------|----|--------|--------|--------|--------|
| 수 | 국토연구원 | 10 | 177.80 | 63.99 | 122.00 | 261.00 |
| | 에너지경제연구원 | 10 | 99.40 | 30.07 | 73.00 | 142.00 |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0 | 113.20 | 23.22 | 95.00 | 162.00 |
| | 한국교통연구원 | 10 | 145.60 | 80.00 | 73.00 | 249.00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0 | 113.60 | 36.41 | 77.00 | 168.00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0 | 143.60 | 81.49 | 62.00 | 265.00 |
| | 한국교육개발원 | 10 | 172.60 | 142.62 | 55.00 | 380.00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0 | 158.10 | 53.51 | 90.00 | 227.00 |
| | 한국노동연구원 | 10 | 77.60 | 8.09 | 63.00 | 87.00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0 | 117.30 | 44.21 | 77.00 | 172.00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0 | 74.20 | 26.98 | 46.00 | 136.00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0 | 165.80 | 104.17 | 81.00 | 339.00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0 | 41.80 | 15.37 | 26.00 | 69.00 |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0 | 88.00 | 44.99 | 46.00 | 153.00 |
| | 통일연구원 | 10 | 48.10 | 18.90 | 32.00 | 85.00 |
| | 한국법제연구원 | 10 | 53.70 | 32.49 | 27.00 | 132.00 |
| | 한국행정연구원 | 10 | 48.80 | 14.65 | 32.00 | 70.00 |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0 | 48.50 | 22.10 | 28.00 | 92.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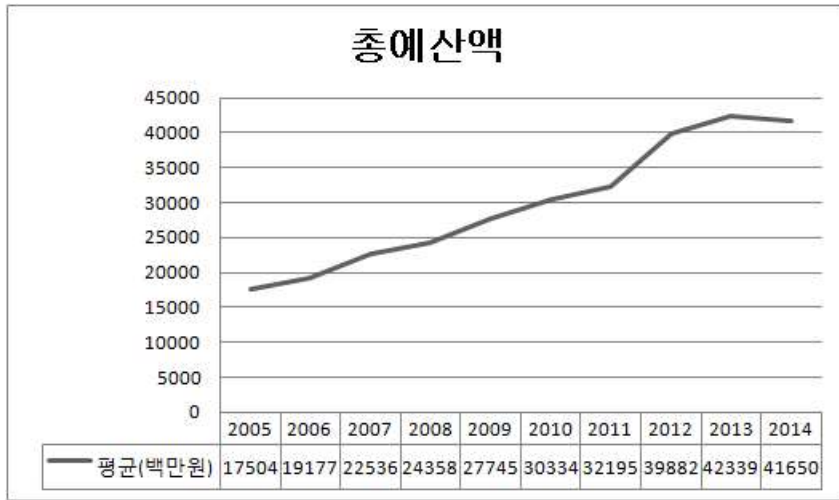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참조>

2) 연도별 통제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① 연도별 총예산액에 관한 기술통계

연도별 통제변수 총예산액에 관한 기술통계의 분석결과는 <그림 5-7>과 같다. 평균적으로 가장 예산이 많았던 연도는 2013년(423억 3900만원)이었다. 반면 평균적으로 가장 예산이 적었던 연도는 2005년(175억 400만원)이었다. 그러나 대체로 매년 총예산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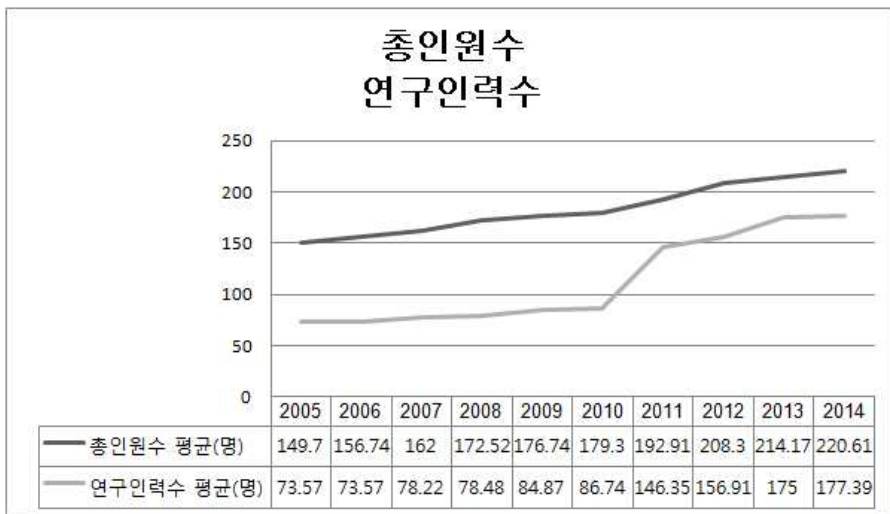
<그림 5-7> 연도별 총예산액에 관한 기술통계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참조>

③ 연도별 총인원수와 연구인력수에 관한 기술통계

<그림 5-8> 연도별 총인원수와 연구인력수에 관한 기술통계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참조>

연도별 통제변수 총예산액에 관한 기술통계의 분석결과는 <그림 5-8>과 같다. 평균적으로 가장 인원 및 연구인력이 많았던 연도는 2014년(220.61명, 177.39명)이었다. 반면 평균적으로 가장 인원 및 연구인력이 적었던 연도는 2005년(149.70명, 73.57명)이었다. 그러나 대체로 총인원수와 연구인력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두 변수는 대체로 비례하였다.

제2절 패널분석

1. 분석결과

2005년부터 2014년 10개년 간 경제·인문사회분야 23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성과와 정책반영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16>과 같다. 앞서 제4장 제2절 연구의 분석모형에서 밝혔듯이, 독립변수 중 정부과제 지원성과는 분석모형에서 제외시켰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간하는 「평가보고서」에 정부과제 지원성과는 2013년, 2014년 자료만 존재하였고, 존재하더라도 다른 독립변수 값이 없는 기관도 존재하여 많은 결측치가 있었다. 따라서 결측치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추정량의 비효율성이 생길 수 있고 추정해야 할 모수의 식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검증의 오류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기 위해 분석모형에서 정부과제 지원성과 변수는 제외시켰다.

합동 OLS(Pooled OLS)의 추정편의를 해결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Hausman-test)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와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에 따라 확률효과모형에 입각하여 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보고서 우수성, 협동연구 추진정도, 기관장 리더십, 기관장 책임경영정도, 기관장 재임기간 5개의 독립변수들과 조직연령, 총예산액, 총인원수, 연구인력수, 정권 5개의 통제변수들이 투입된 결과 R^2 이 0.431로서 종속변수(정책반영)를 43.1%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성과물이 정책반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에서, 연구보고서 우수성, 기관장 책임경영정도, 조직연령, 정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협동연구 추진정도, 기관장

리더십, 기관장 재임기간은 통계적으로 종속변수(정책반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 우수성은 1% 유의수준에서 종속변수(정책반영)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연구보고서의 우수성이 1점 증가할수록 정책반영이 0.359점 증가하였다. 또한 기관장 책임경영정도 역시 1% 유의수준에서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관장 책임경영정도가 1점 증가할수록 정책반영이 0.294점 증가하였다.

통제변수인 조직연령과 정권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연령은 10% 유의수준에서 종속변수에 부정적인 영향(-0.13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권에 대해 살펴보면, 보수정권이 진보정권에 비하여 정책반영에 긍정적인 영향(9.273)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표 5-16> 패널분석 결과

| | | 합동 OLS (Pooled OLS) | | 고정효과 모형 (Fixed Effect Model) | | 확률효과 모형 (Random Effect Model) | |
|------|------------------|------------------------|----------|---------------------------------|----------|----------------------------------|----------|
| 구분 | 변수명 | 회귀계수 (t-value) | 표준 오차 | 회귀계수 (t-value) | 표준 오차 | 회귀계수 (t-value) | 표준 오차 |
| 설명변수 | 연구보고서 우수성 | 0.360*** (2.598) | 0.139 | 0.330* (1.955) | 0.169 | 0.359*** (2.579) | 0.139 |
| | 협동연구 추진 정도 | -0.039 (-0.586) | 0.067 | -0.080 (-1.085) | 0.074 | -0.041 (-0.616) | 0.067 |

| | | | | | | | |
|------------------|---------------------------|---------------------|--------|----------------------|--------|---------------------|--------|
| | 기관 장 리더 십 | 0.098 (1.524) | 0.064 | 0.111 (1.469) | 0.076 | 0.098 (1.530) | 0.064 |
| | 기관 장 책임 경영 정도 | 0.294*** (4.070) | 0.072 | 0.277*** (3.420) | 0.081 | 0.294*** (4.067) | 0.072 |
| | 기관 장 재임 기간 | 0.001 (0.498) | 0.001 | 0.001 (0.633) | 0.002 | 0.001 (0.504) | 0.001 |
| 통 제 변 수 | 조직 연령 | -0.136* (-1.845) | 0.074 | -0.352 (-0.531) | 0.663 | -0.135* (-1.785) | 0.076 |
| | 총예 산액 | -0.540 (-0.313) | 1.726 | 1.623 (0.474) | 3.423 | -0.488 (-0.279) | 1.749 |
| | 총인 원수 | 3.853 (1.466) | 2.628 | 4.463 (0.877) | 5.090 | 3.876 (1.456) | 2.662 |
| | 연구 인력 수 | -2.364 (-0.942) | 2.511 | -4.679 (-1.341) | 3.488 | -2.480 (-0.984) | 2.519 |
| | 정권 | 9.231*** (5.514) | 1.674 | 10.701*** (3.606) | 2.967 | 9.273*** (5.533) | 1.676 |
| | 상수 | 17.967 (1.027) | 17.502 | 14.720 (0.442) | 33.286 | 18.060 (1.023) | 17.658 |
| | N | 124 | | 124 | | 124 | |
| | R ² | 0.431 | | 0.449 | | 0.431 | |

*, **, *** :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2. 가설검증과 해석

연구성과물이 정책반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패널분석을 한 결과, 연구보고서의 우수성과 기관장 책임경영정도만이 정책

반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협동연구 추진정도, 기관장 리더십, 기관장 재임기간은 정책반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과 가설 2-2가 채택되었으며, 그 외 가설들은 기각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17>과 같다.

<표 5-17> 가설검증 결과

| 가설 | β방향 |
|---|-----|
| 가설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분야성도가 우수할수록 정책반영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1-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우수할수록 정책반영도가 높을 것이다. | (+) |
| 가설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분야성도가 우수할수록 정책반영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2-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책임경영정도가 강할수록 정책반영도가 높을 것이다. | (+) |

첫째, 가설 1-1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우수할수록 정책반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공재적 지식을 생산하고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조직성과의 핵심은 우수한 연구성과와 그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설1-1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1-1을 통해 연구조직이 정책의제를 형성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향상시켜야 할 역량은 연구의 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가설 2-2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책임경영정도가 강할수록 정책반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반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분야성과 뿐 아니라 경영분야의 성과 역시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관장 책임경영정도에는 경영목표실천계획 대비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내·외부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얼마나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는지(정부부처·감사원·국회 및 자체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책임경영을 얼마나 이행하였는지 등의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목표란 조직이 정책과 활동을 운영함으로써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 다시 말해서 조직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기관장이 조직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경영목표를 이행하고 책임경영을 수행할수록 정책반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절 종합적 분석

1. 기존연구와의 비교

기존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동일한 부분은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변수이었다. 이광훈 외(2014)의 연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기여도는 연구역량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훈 외(2014)에서는 조직의 전문성(연구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국책연구원이 산출한 연구보고서의 우수성을 평가한 점수를 활용하였는데, 연구보고서의 질이 연구인력들의 역량과 질적 수준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이는 본 연구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우수할수록 정책반영도가 높았다는 결과와 동일한 결과였다.

반면 기존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결과가 차이나는 부분은 기관장 책임경영정도 변수이었다. 이광훈 외(2014)의 연구에서 기관장의 재임기간과 재임여부가 정책형성과정에서 담당하는 기능 및 역할에 있어서 정책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광훈 외(2014)에서는 리더십의 전문성의 대리변수로 기관장 재임기간을 사용하였고, 리더십의 자율성 측의 영향요인으로 기관장 재임여부(기관장 출신배경 여부)를 사용하였다. 그에 따라 원장의 재임기간이 길수록 정책기여도가 높았고, 정부출신 원장이라고 정책기여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도 기관장 리더십 변수가 분석모형에 포함되었으나, 이 변수는 경영·인문사회연구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소관 연구기관 성과평가 항목 중에 「리더십」의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대내·외적 소통 능력’의 점수를 합산한 값이었다. 따라서 이광훈 외(2014)에서 변수로 정의한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에서도 차이가 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광훈 외(2014)에서는 재임기간이 정책기여도의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지

만, 본 연구에서 기술통계 분석 결과 대부분 기관의 기관장은 평균 400일-600일 정도의 재임기간을 가지며, 기관별 기관장 재임기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성과와 정책반영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패널분석에서도 유의미한 요인이 아니었다.

2. 인터뷰 조사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현실에 실무자(연구자)는 연구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A 연구자와 인터뷰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 수 있었다.

첫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구보고서의 경우 유형에 따라 정책기여도가 달라진다고 설명하였다. 학술적인 의미의 기본과제는 정책반영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연구보고서가 우수할수록 정책반영도가 높다’는 패널 회귀분석의 결과는, 연구보고서의 유형과 상관없이 연구보고서를 연구기관의 평가와 동일시하여 정책반영의 점수를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즉 연구의 질이 보장되는 연구기관의 근본적인 기능의 평가와 정책반영의 점수를 동일하게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협동연구 추진정도가 정책반영에 무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에 동의하였다. 이공계와 달리 사회과학의 경우 연구기관은 학교와 대부분 학술적인 협동연구를 하기 때문에, 협동연구 추진정도가 정책반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실제 사회과학분야 협동연구의 성격이 현안대응은 거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연구원에서 전공 이외의 사안을 전문성 있는 교수님께 세미나 형식으로 부탁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협동연구 범위에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그것을 협동연구 추진정도에 포함시킨다면 정책반영도와 연결이 될 수 있다

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원 간의 협동연구 비율에 계량적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협동연구 추진정도가 정책반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기관장의 리더십이 정책반영에 강력하게 작용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내부출신 기관장의 경우, 연구원 안에 이미 조성된 정치적인 구조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고, 발휘하더라도 연구원 연령이 평균 30년이 되었고 연구인력수가 평균 200-300명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외부출신 기관장의 경우, 기관장이 연구원 내부를 파악하기 힘들고 파악하기 전에 임기가 완료되거나 사임하는 경향이 있어 역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기관장의 리더십 평가와 연구원의 움직임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장의 리더십과 정책반영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관장 책임경영정도는 계획목표 달성 여부와 그 정도, 외부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응 등을 합산한 점수인데, 이는 내부적으로 공표한 어젠다를 실현하고 외부의 지적사항을 수정하여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반영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기관장 책임경영정도는 기관장 개인의 리더십을 조직 전체로 확산시키는 중간단계로 이해되므로 이 변수를 해석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기관장의 힘(Power)의 정도, 정권의 교체 등의 성격에 따라 기관장의 재임기간은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재임기간이 짧다고 하여 기관장의 힘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재임기간이 길다고 하여 기관장의 리더십이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기관장의 재임기간과 정책반영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정부과제 지원성과는 정책반영에 중요한 지표이지만 실제 이 지표를 계량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았다.

연구보고서의 우수성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수탁을 얼마나 받주었는지’가 정책반영에 직접적인 변수라고 의견을 밝혔다. 기본과제의 경우, 국정과제를 반영하지만 제목만 국정과제의 의미를 띄고 그 안의 내용은 연구자의 연구취향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용역이나 수탁과제 발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 그 요인을 정량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인적구성 관련 변수와 조직문화 변수가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사연령 여부에 따라, 선임 연구위원 수에 따라, 연구원 개개인의 인성에 따라 정책반영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변수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후속연구에 필요하겠다고 제안하였다.

B 연구자와 인터뷰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첫째, 변수선정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기관장의 책임경영정도 변수가 정책반영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이유는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항목 때문이라고 보았다. 연구기관의 경영 및 성과목표에는 결국 양질의 연구성과물이 포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항목은 연구보고서의 산출과 관련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가 높아 기관장이 책임경영을 했을 것이다’라고 설계한 것을 해석할 때에는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실질적으로 국정과제의 연구가 정책반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과제 지원성과 변수가 분석모형에서 제외된 것이 아쉽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다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권이 바뀌면 정책과제 뿐만 아니라 기본과제를 채택할 때 국정과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하였다.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는 국정과제의 경우는 공무원들이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까지 정책집행을 하려

고 하기 때문에 연구의 정책반영률이 높다고 보았다.

셋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협동연구 추진 정도는 정책반영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라는 연구결과에 동의하였다. 협동연구 추진 정도는 각 연구기관에서 계획서 상으로 잡아놓고 했는나의 여부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가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물론 연구기관이 협동연구를 한다는 것은 연계협력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관련 부처와 그 부처에 소속된 연구기관 간에 수탁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정책반영도는 더욱 높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즉각적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협동연구의 결과물을 반영하는 기관자체도 희박하다고 지적하였다.

기관장의 리더십이 정책반영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기관장이 조직을 어떻게 설계하고,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즉 기관장의 성향, 기관장의 경영평가에 대한 생각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기관 출신(장·차관 출신)의 기관장은 정책반영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고, 학교 출신 기관장은 논문기고, 기관 네트워킹 등 학술적인 영역을 중요시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관장이 경영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결과로 ‘모든 연구기관의 기관장이 그럴 것이다’란 일반화는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영평가에서 리더십은 정량적인 부분보다 정성적인 부분이 크고, 대외활동(세미나 개최, 기관 네트워킹 원활화, 국제교류)을 많이 하여 리더십 점수가 높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실제 연구자는 연구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줄 때 기관장의 리더십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설 2-1이 채택이 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 연구원들이 우수한 연구 보고서를 생산하는데 기관장이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했는지’에 대한

항목이 변수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넷째, 정책반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책적 환경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정책적 환경에서 국정과제가 정책반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국정과제 중 수탁과제, 정책과제, 기본과제 순으로 정책반영도가 높다고 밝혔다. 수탁과제는 당장 공무원이 국정과제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원에 의뢰하는 과제라고 설명하였다. 즉 공무원이 어떤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연구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유형, 사업내용, 추진체계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수탁과제를 의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과제의 정책반영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정책과제는 주제선정 기간이 수탁과제보다 길고, 공무원이 국정과제 수준에서 연구원으로부터 장기적·주기적으로 제안받기를 원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수탁과제 다음으로 정책반영도가 높다고 보았다. 정책과제는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으로 설계되어 공무원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사업집행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정책과제는 제안 및 수정되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과정에서 수탁과제와는 달리 공무원과 연구자 간의 해석을 둘러싼 모호한 영역(ex. 누구의 노력으로 정책반영이 되었는가)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본과제는 일반적으로 정책반영도가 가장 낮다고 평가되지만,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정책반영에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기본과제는 연구자가 국정과제에 연연하지 않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고안한 창작물로서, 훗날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는 국회의원·인수위 위원·고위 공무원에 의해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되어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정책은 반영되는 경로도 다양하고, 영향을 미치지만 드러나지 않는 연구자의 영향력도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반영도의 깊이(depth)로 보아, 기본과제는 실제로 정책영역에 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논문에 한계를 살펴보면, 정책반영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연구설계의 설명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본 논문에서 이용한 주요 연구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발간하는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소관연구기관 평가결과」는 정량적인 부분만을 평가한 단년도 평가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이고 제도개선까지 포함된 깊이 있는 정책반영도는 알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정책반영도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책반영도에 제도개선까지 포함된 깊이 있는 정책반영도의 조작적 정의는 가설의 설명력을 보다 높일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여섯째, 주요 연구자료는 신뢰하지만 한계 또한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신뢰하지만, 평가자-피평가자 간 이해관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반영도를 설명하는 평가지표로서의 한계는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화두를 던져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가령 i)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가 연구원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체계인가의 문제, ii)평가자료로 연구원을 평가할 것인가 연구의 질로 연구원을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 iii)연구원의 본질을 학술적으로 볼 것인가 실용적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등이다. 이는 모두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봐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일곱째, 정책반영도를 높이기 위한 제언을 한다면, 수탁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공무원 조직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관장 입장 뿐만 아니라 연구자 입장에서 경쟁력 있게 연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수탁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현 연구원의 시스템에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탁과제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연구원의 시스템 때문에 학술적인 기본과제를 소홀히 하고 경시하는 풍토는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연구자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본과제를 보다 충실하고 우수하게 창출해내었을 때,

공무원 조직에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연구자-공무원 간 신뢰성 있는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책연구원일수록 공무원 조직에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우수한 기본과제 연구보고서를 창출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는 다른 방법을 이용한 연구를 후속연구로 제안하였다. 가령 국회의원, 기관장, 장관 등과 같이 정책반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본 연구와는 다른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하였다. 또한 단년도 평가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깊이 있는 부분까지 포함한 자료를 이용한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3. 종합적 분석

이상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밝힌 정책반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동일한 부분도 있었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 또한 있었다. 연구역량(조직의 전문성)인 연구보고서 우수성이 정책반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사실은 기존연구와 동일하였다. 하지만 기존연구에서 정책반영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였던 기관장 재임기간(리더십의 대리변수)은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변수는 아니었다.

인터뷰 조사의 연구자(인터뷰이, Interviewee)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각각의 연구자가 분석결과에 대해 동의하더라도, 동의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있었다. 우선 A연구자는 대체로 연구결과에 동의를 하였다. ‘연구보고서가 우수할수록 정책반영도가 높다’는 본 연구결과는, 연구보고서의 유형과 상관없이 연구보고서를 연구기관의 평가와 동일시하여 정책반영의 점수를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밝혔다. 협동연구 추진정도가 종속변수에 무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에도 동의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협동연구가 학술연구 위주고,

연구원 간 협동연구의 비율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기관장 리더십, 기관장 재임기간 역시 무의미한 변수라는 결과에 동의하였다. 즉 기관장의 출신여부(내·외부)에 따른 기관장 리더십과 기관장 힘(Power)의 정도에 따른 재임기간 변수는 정책반영과 상관관계가 없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기관장 책임경영정도는 기관장의 리더십을 조직으로 확산시키는 중간단계로 이해되기에 기관장 책임경영정도 변수를 해석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B연구자는 연구결과에 대체로 동의하였지만, 결과를 해석하는데 유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과제 지원성과 변수가 분석모형에서 제외된 것은 아쉬운데 이는 국정과제가 실질적으로 정책반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A연구자와 마찬가지로 협동연구 추진정도가 종속변수에 무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에 동의하였는데, 연구기관이 계획서 상에 협동연구 추진정도를 잡느냐의 여부로 변수를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관장의 리더십 변수는 기관장 성향, 기관장 출신여부에 따라 다른 경영목표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기관장 책임경영정도 변수는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항목이 포함되어, 포괄적으로는 연구보고서 산출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변수라는 결과가 도출된 것 같다고 주장하며 역시 해석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기존연구와의 비교 및 인터뷰 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한 보다 설명력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록 다양한 전문가와의 인터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해석할 수는 없지만, 양적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질적 연구 방법으로 보완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이 정책반영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과 정책지식생산 및 활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경제·인문 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와 정책반영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 함의를 살펴보았다.

우선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분석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연구성과와 정책반영에 관한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까지 확대하여 성과관리 및 시스템의 운영실태에 대한 개략적인 선행연구 검토를 하였고,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야별로 성과관리 및 시스템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제·사회인문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분석대상을 국한하여 살펴볼수록 성과평가 결과를 실증 분석한 연구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과 선행연구의 한계를 토대로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2005-2014년 간 연구성과가 정책반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분야성과(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정부과제 지원성과, 협동연구 추진정도)가 우수할수록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분야성과(기관장 리더십, 기관장 책임경영정도, 기관장 재임기간)가 우수할수록 정책반영되는 정도도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결측치가 많아 추정량의 비효율성이 생길 수 있는 정부과제 지원

성과 독립변수를 제외한 후 패널분석을 한 결과, 연구보고서의 우수성과 기관장 책임경영정도만이 정책반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협동연구 추진정도, 기관장 리더십, 기관장 재임기간은 정책반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분석 결과를 통해 정책의제를 형성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연구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조직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바로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관장이 조직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경영목표를 이행하고 책임경영을 수행할수록 정책반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패널분석을 토대로 기존연구와의 비교 및 인터뷰 조사를 한 결과,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동일한 부분도 있었고,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었으며, 결과에 대한 해석의 차이도 존재하였다. 연구역량(조직의 전문성)인 연구보고서 우수성이 정책반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사실은 기존연구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인터뷰이(Interviewee, 인터뷰 조사의 연구자)는 연구보고서의 성격에 따른 유형에 따라 정책반영도는 다를 것이라고 보았다. 기존연구에서 정책반영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였던 기관장 재임기간(리더십의 대리변수)은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변수는 아니었다. 이에 대해 인터뷰이 역시 기관장 재임기간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연구결과에 동의하였다. 반면 기관장 책임경영정도의 조작적 정의가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변수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제2절 이론적 함의 및 정책의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 및 정책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책지식활용에 초점을 맞춰 연구성과와 정책반영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정책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권위 있는 정부기관의 행동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정책지식은 정책전문가 공동체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되고, 그 복합적인 정책지식은 현실세계에 적합한 실용적인 지식으로 바뀐다. 이와 같이 생산된 정책지식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기 때문에 정책지식의 생산자는 정책지식활용의 적실성 문제를, 수요자는 그 지식의 활용성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지식을 생산하는 생산자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현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지, 그 지식을 수요자가 정책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본 연구는 정책지식활용의 측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이 정책반영에 미치는 요인에 관해 분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연구대상으로 그 연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실제 정부기관 및 정부부처, 연구기관이지만 분야가 다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연구대상으로 한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에 비해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에 초점을 맞춘 실증분석은 많았지만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실증분석 한 연구 또한 부족하였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23개 경제·인문사회연구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2005년-2014년 간 연구성과가 정책반영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도출된 결과물로부터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정책반영과 관련해 정부싱크탱크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목표 및 발전방향 제시하였다. 우선 정책지식활용 수요자인 정부가 필요한 적실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조직으로서 본연의 기능인 양질의 정책지식 생산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은 경영목표를 이행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정책반영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모형에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연구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측면의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연구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4-1>에서 제시한 것처럼 개인수준, 조직수준, 환경 및 제도적 수준 등 다양하다. 특히 변수에 깊이와 정성적 부분까지 포함시켜 보다 정교하게 조작한 분석모형의 연구를 후속과제로 남겨둔다. 또한 결측치가 많아 분석모형에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가장 큰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정부과제 지원성과 변수를 포함한 국정과제, 조직문화, 조직행태 및 이해관계자 등과 같은 영향요인이 고려된 심도 있는 분석도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둘째, 연구성과물과 정책반영의 상관관계 검증에 사용한 연구자료에 대한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발간하는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 「소관연구기관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2005-2014년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패널 데이터를 주요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소관 연구기관을 평가하는 방식은 평가체제, 평가단 구성의 적절성, 평가주기 등에 관한 쟁점사항이 있었다. 따라서 연구성과물과 정책반영에 개념을 보다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한 정교한 분석을 향후 연구과제로 둔다.

셋째,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경성자료(hard data)를 통한 양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또한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선에서 연구하는 전문가(연구자)와의 인터뷰를 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와의 인터뷰 조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맥락(ex. 정책반영에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 기관장, 장관과 같은 중요한 사람들과의 인터뷰 조사 등)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심도 있는 질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시기와 연구대상의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2005-2014년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제한된 시기의 연구성과물과 정책반영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는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실제 국무총리실 통합연구회 체제로 바뀐 후 연구평가를 실시했던 1999년부터 현재까지를 아우르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연구대상을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만으로 한정지어 분석해 보았다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경제·인문사회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비교연구가 가능할 것이며 설명력 높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08). 2008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5). 2015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
- 경제사회연구회(2000). 선진국 연구기관 제도 및 운영사례.
- 길종백·염재호(2008). 공공 R&D 자금배분과 정부출연(연): PBS의 한계와 방향 탐색.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 김계수·이민형(2005).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 운영체제 (PBS) 개선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5-15.
- 김권식·이광훈(2014). 공공연구조직의 자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탐색: 자원기반이론의 적용. 「한국행정연구」 제23권 제2호.
- 김도년·주상호(2014).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DEA 활용방안과 결과. 한국경영학회. 2014년 통합학술발표논문집 (2014.8). 1921-1944.
- 김선빈 외(2007). 대한민국정책지식생태계.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김성현·명성준(2010).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정책지식 생산 및 정책지원 역할에 대한 연구: 미래예측 분야의 연구를 중심으로.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용훈·오영균(2008).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제17권 제3호. 279-297.
- 김이수·조만형(2009).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판석(2007). 싱크탱크의 발전과 정책연구: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사례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1권 제1호(2007.3). 31-61.
- 김홍식·박근영(1998).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평가에 관한 실증연구. 「충청회계학연구」. 제3권 제1호.
- 곽승진 외(2011).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립도서관 운영

전략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 311-330.

노영희(2007). 인터넷 지식거래소의 지식정보유통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 135-156.

류지성(2007). 정책학. 서울: 대영문화사.

목진휴 외(2007). 한국 정책학 교육의 실태분석과 발전을 위한 제안. 한국정책학회보. 제16권 제4호. 97-120.

민인식·최필선(2012).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학회.

박치성 외(2011). 정책지식 활용 네트워크: 국책연구기관과 정부부처 간의 정책지식 교환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20권 제4호. 93-117.

엄준용·조홍순(20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체제의 발전 방향 탐색. 교육문제연구(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제27집. 107-133.

왕재선·김서용(2009). 조직혁신의 다차원성과 결정요인: 혁신속도, 범위 및 빈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3권 제3호. 73-99.

유훈(2010). 정책학원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윤두섭·김권식(2014).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보화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24권 제1호. 49-71.

이광훈 외(2014). 정부싱크탱크의 정책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자원의존이론의 관점. 행정논총. 제52권 제2호(2014.6). 91-117.

이길우 외(2012). 정부 R&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SSUE PAPER 2012-02.

이민형(2003).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의 자금조달환경의 불확실성이 관리통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PBS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연구」 제11권 제1호.

이민형 외(2012).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 및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12-02.

이석희(2003).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혁정책의 평가분석. 「중앙행정논집」 제16권 제2호. 29-57.

이지수(2009). 국가 정책지식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논문.

이찬구(2009). 연구기관 평가의 실증 분석: 평가 참여자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제12권 제1호. 36-69.

이홍재·차용진(2006a). 지식창출과 업무성과에 관한 연구: 지식창출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0권 제2호. 99-124.

이홍재·차용진(2006b). 지식관리 활동과 업무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구조방정식 모형접근. 「한국행정학보」 제40권 제3호. 105-127.

이홍재·차용진(2009). 공공부문의 지식관리에 관한 연구: KM 기반요인, KM 활동, KM 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18권 제1호.

장지인 외(2008). 정부기관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관리회계연구」 제7권 제3호(2008.2).

정광호(2005). 정책과정에서의 미국 싱크탱크(Think Tank)의 활동과 역할에 관한 예비적 분석. 행정논총. 제44권 제1호.

정윤수 외(2008).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물 분석·관리의 현황과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4). 713-738.

정정길 외(2008).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정한규·손태원(2004). 연구개발조직의 창의적 연구환경과 조직효과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인사조직연구」 제12권 특별호. 127-165.

조희진·조근식(2013). 기술혁신의 영향요인 분석: 조직의 혁신역량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22권 제4호. 165-195.

채승병 외(2006). 정책지식 생태계 활성화전략의 행위자기반 접근. 삼성경제연구소 제1회 복잡계 컨퍼런스 발표논문.

최문정 외(2010).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평가의 발전방안 및 성과제도를 위한 방안도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보고 2010-30.

최재녕(2010). 국책연구기관 연고보고서 성과분석 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9권 제3호. 231-246.

허만형 외(2011). 국책연구기관 정책연구의 지식활용에 관한 연구: 지식의 현실적합성, 임파워먼트 및 지식활용 수준의 비교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1권 제4호. 145-166.

허범(1981). 기본정책의 형성과 운용. 중앙공무원교육원(편). 고급관리자과정교재. 5-19.

홍준형(2008). 행정학, 정책학 교육의 방향 모색: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신설과 교육과정 개편.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황윤원(2006). 정부부문 싱크탱크의 실태 분석과 발전방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3권 제3호(2006.12). 385-416.

황창호(2014). 정부의 정책기조와 정책지식 생산에 대한 연구: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정책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20권 제1호. 155-194.

2. 국외문헌

Abelson, D.E.(1996). American Think Tanks and their Role in US Foreign Policy. New York: St Martin Press.

Abelson. D.E.(2000). Do Think Tanks Matter? Assessing the Impact of Public Policy Institutes.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Abelson. D.E., and C.M. Carberry.(1997). Policy Experts in Presidential Campaigns: A Model of Think Tank Recruitment.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27(4): 679-697.

Aron Wildavsky and Jeffrey L. Pressman.(1979).

Implementation(2nd ed).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obrow, D.B. & Dryzek, J.S.(1987). Policy Analysis by Design.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Dye, Thomas R.(1978). Understanding Public Policy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Easton, David.(1965).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Wiley.

Fischer, F.(1991). American Think Tanks: Policy Elites and the Politicization of Expertise. Governance. 4(3): 332-353.

Hass, P.M.(1992). Introduction: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3.

Kingdon, J.W.(1995).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2nd ed). New York: Harper Collins.

Landry, R., N. Amara & M. Lamari.(2001). Utilization of Social Science Research Knowledge in Canada. Research Policy. 30(2): 333-349.

Lasswell, H.D.(1951). The Policy Orientation. In H.D. Lasswell and D.Lerner(eds). Policy Sciences. California: Stanford Univ. Press. 3-15.

Leonard, D. & S. Sensiper.(1998). The Role of Tacit Knowledge in Group Innovation.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Special Issue on Knowledge and the Firm. 40(3): 112-132.

Nonaka, I.(1991). The Knowledge-Creating Company. Harvard Business Review. Nov-Dec. 96-104.

MacRae, Jr., D.(1985). Policy Indicators: Links between Social Science and Public Debate.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McGann, James G., and R. Kent Weaver. (2000). 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Catalysts for Ideas and Action.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McGann, J.G.(2005). Think Tanks and Policy Advice in The US.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Oh, C.H.(1997). Issues for New Thinking of Knowledge Utilization: Introductory Remarks. Knowledge and Polic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Transfer and Utilization. 10(3): 3-10.

Posen, Adam S.(2002). Think Tanks: Who's Hot and Who's Not; The Latest Study Comparing Economic Think Tank Visibility in the Media. The Hot Economists and Hot Topics. The International Economy. 16(4): 8-17.

Rich Andrew.(2004). Think Tanks, Public Policy and Politics of Experti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one, D., and Andrew Denham.(2004). Think Tank Traditions: Policy Research and the Politics of Idea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Theodore J. Lowi.(1970). Decision Making vs. Policy Making; Toward an Antidote for Technocrac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30.

Y. Dror.(1983). Public Policymaking Reexamined. New Brunswick: Transaction Inc. 14-17.

3. 웹사이트

알리오 www.alio.go.kr

프리즘 www.prism.go.kr

국가연구정책포털 www.nkis.re.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www.nracs.re.kr

국무총리 www.pmo.go.kr

기획재정부 www.mosf.go.kr

4. 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8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 제20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정관」(제47조)

Abstract

A Study on the Policy Reflection of Research Result: from the Government-Contributed Research Institute Studying about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HyeKyeong Ahn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Government-Constituted Research Institute as government think tanks focusing on economic and science from the 1970s to the 1980s had a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due to rapid change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Government-Constituted Research Institute had several problems; It was still subject to government ministry and its operating system didn't guarantee researchers freedom of study environment. So it had limitation on lack of system to

ensure the quality of research results. To solve this problems, the government has launched research council system in 1999 and integrated between research council in 2005. Research institute affiliated to government ministry was transferred to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research council. And then research council annually evaluated management and research result of Government-Contributed Research Institute. Therefore, research council's evaluation has important meaning.

This study begins with problem recognitions; that is research result of Government-Contributed Research Institute affects how much policy is reflected and if so, what factors have effect on policy reflection. Accordingly, the hypothesis is made that research result of Government-Contributed Research Institute has influence on policy reflection. Clarifying the hypothesis, it is as in the following. The better research result(excellence of research report, support of government project, degree of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s, the higher degree of policy reflection is. The better management achievement(leadership of chief, responsible management degree of chief, tenure of chief) is, the higher degree of policy reflection is. Main study data is research result from 2005 to 2014 and main study object is 23 Government-Contributed Research Institutes studying about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Main study methods are statistical analysis and interview investigation.

As the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two hypotheses are adopted. First, excellence of research report has positive effect on the policy reflection. Second, responsible management degree of chief also has positive effect on the policy reflection. By the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it is prove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to Government-Constituted Research Institute as government think tanks is to develop quality of the study. And it is proved that chief of organization need to more perform responsible management for organization of survival and growth. As the result of interview investigation, researcher agreed that excellence of research report has positive effect on the policy reflection. But,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carefully regarding responsible management degree of chief. Because operational definition on responsible management degree of chief isn't elaborated.

So this study suggests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 result and policy reflection analyzed from the application of policy knowledge. And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result evaluation about Government-Constituted Research Institute studying about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goals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to Government-Constituted Research Institute.

Keywords : Research Result, Policy Reflection, Application of Policy Knowledge, Government-Contributed Research Institute

Student Number: 2011-22201

